

# 중국산업경제브리프

2014년 12월호

- ◆ 이슈 분석: 2015년 중국경제 향방
- ◆ 산업분석: 한중 FTA가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전략
- ◆ 산업정책해설: 국무원 수입 장려 조치 발표
- ◆ 산업 동향 분석
  - 10월 중국 공업 부가가치 7%대로 하락
  - 11월 중국 제조업 PMI 지수, 관방과 민간 모두 하락세
- ◆ 산업단신
  - 제3차 전국경제서베이 조사 결과 발표
  - 中 재정부, 자동차 타이어 등 4가지 상품의 소비세 취소
  - 中, 석유 비축량 처음으로 공개
  - 민간자본의 공공인프라 투자 허용과 장려
- ◆ 특별기고: 중국 전력산업 현황과 한중 협력 확대방안

## 산업연구원 북경지원(韓國産業研究院北京代表處)

연락처: 北京 Tel 010-8237-8633, Fax 010-8237-8663

인터넷전화(한국) 070-8837-3212; E-mail: [kietcn@naver.com](mailto:kietcn@naver.com)

산업연구원 중국산업 홈페이지([www.china.go.kr](http://www.china.go.kr))

\* 지난 호는 산업연구원 중국산업 홈페이지에서 구독 가능



## 2015년 중국경제 향방

북경지원장 이문형

### 1. 중국정부의 2015년 경제정책 방향과 특징

#### □ 뉴노멀 시대하에서 안정과 개혁중 개혁에 더 방점

- 시진핑 주석이 주창하는 ‘뉴 노멀(新常态)’ 과 ‘뉴 실크로드(一帶一路)’ 가 최대의 정책 화두로 등장
  - 후진타오 정부 시절 10%대의 경제성장률이 시진핑 정부에 7%대로 주저앉은 데에 대한 당위성으로 뉴 노멀을 주장
  - G2에 걸맞는 외교적, 경제적 위상 확보, 미국의 대중국 봉쇄정책, 자원 확보 및 시장확대, 국내 지역균형정책 차원에서 뉴실크로드 정책을 추진
- 현재 중국경제는 10%대의 고도성장기(올드 노멀; 舊常態)에서 7%대의 중고속성장기(뉴 노멀)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으며 뉴 노멀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능동적 대응을 시진핑 주석은 강조
- 현재 중국이 직면하고 있는 뉴 노멀의 경제적 특징을 9가지로 규정
  - ① 소비(모방형, 파동식→개성화, 다양화로 전환), ② 투자(SOC간 상호 연계, 민간 참여 등 다양한 투자 통로, 신산업 등장), ③ 생산요소(인적자본과 기술의존도 심화), ④ 생산시스템(소형화, 스마트화, 전문화), ⑤ 경제리스크(부동산 거품, 그림자 금융 등 상존), ⑥ 자원배치와 거시정책(공급과잉 해소와 시장기능 강화), ⑦ 자원환경 제약(녹색성장, 저탄소발전 중

요), ⑧ 시장경쟁(질적 제고, 차별화가 경쟁력), ⑨ 수출과 국제수지(첨단 기술도입과 해외투자가 대세)

○ 뉴 노멀 시대에서의 경제정책 목표는 과거 성장률 중심에서 신규 일자리 창출 중심으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

- 올드 노멀 시기에는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확정하고 그에 따라 물가상승률, 신규 일자리 창출 목표를 설정

- 뉴 노멀 시대에서는 경제와 민생안정 차원에서 신규 일자리 창출 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따라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목표치를 설정

○ 2013년과 2014년의 경제공작회의는 모두 ‘안정속의 개혁(穩中求進)’을 강조하고 있지만, 발표문 행간상 해석에서 다소의 차이가 존재

- 2013년에는 경제안정이 개혁보다 중요하였으며, 2014년(뉴 노멀)에는 안정과 개혁이 동일한 위상으로 전환

- 개혁 부문에서는 정부 규제완화와 행정권한의 이양, 국유기업 개혁과 독점구조 타파, 시장기능의 활성화, 민간자본의 금융산업·SOC 산업 참여 장려 등이 강조

## □ 2015년 핵심 경제정책 방향과 주요 내용

○ 2015년은 12.5 계획의 마지막 해로 경제의 안전성과 개혁 심화, 정책의 연속성이 강조, 2014년 중앙경제공작회의(12.9~12.11)에서는 5대 임무를 하달

- 5대 임무: ① 안정적 경제성장 유지, ② 신성장 동력 발굴, ③ 농업발전 방식 전환, ④ 경제발전공간 최적화, ⑤ 민생안정 정책 강화

- 2014년과 비교해서 지방부채 리스크 관리가 제외된 반면, 신성장 동력 발굴이 새롭게 추가되면서 강조되고 있음.

표 1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 역대 중앙경제공작회의 요약

개최 일자	핵심 목표	주요 정책
2007.12.3.-5.	총량 억제, 물가 안정	균형 재정정책, 긴축통화; 저임금구조 개선, 사회보장제도 개선, 무료 의무교육 도입
2008.12.8.-10.	내수 확대	확대재정, 확대금융정책; 주거환경 개선, 부동산 시장 활성화
2009.12.5.-7.	적극적 경기부양	소비촉진, 도시화 건설, 전략적 신흥산업 육성, 공급과잉 산업 억제,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
2010.12.10.-12	물가안정속에 비교적 빠른 성장 유지	확대재정, 균형통화정책: 식량가격 현실화, 지방정부 부채관리 통제, 삼농정책과 중소기업 육성정책
2011.12.12.-14	안정적 성장, 물가 억제, 구조조정	확대재정, 균형통화정책: 부동산시장 억제와 집값 안정
2012.12.15.-16.	안정적 성장	확대재정, 균형통화정책: 정부지출 억제, 대출규모 증가 허용, 개혁 심화와 로드맵 제시
2013.12.10.-13	안정속에 개혁 심화	확대재정, 균형통화정책: 식량안전확보, 산업구조고도화, 지방부채리스크관리, 지역간 균형발전, 민생경제보장, 대외개방확대
2013.12.9.-11	안정속에 개혁심화	확대재정, 통화정책의 융통성: 안정적 경제성장 유지, 신성장 동력 발굴, 농업발전 방식 전환, 경제발전공간 최적화, 민생안정 정책 강화

자료: 본 논문 정리

- 한편, 중국정부의 연간 경제정책은 중공 정치국 확대회의(12.5)에서 정책 방향 확정 → 중앙경제공작회의(12.9-11)에서 공감대 형성 →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전국회의(12.12)에서 세부지침 하달 형태로 수립, 집행
- 경제의 안정을 위해서 예년과 유사하게 확대재정정책을 강조하고 있으며, 통화정책에서는 다소의 융통성을 강조
  - 내년도 재정적자 규모는 1조 6,500억 위안으로 금년보다 3천억 위안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중국사회과학원), 이에 따라 재정적자의 GDP 대비 비중은 2014년도 2.1%에서 2015년에는 2.5%로 확대될 전망
  - ※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영업세를 부가가치세로 전환하는 작업이 계속 추진될 예정

- 통화정책에서는 느슨함(松繫)을 강조하고 있으며, 필요시 금리와 지불준비율을 수 차례 인하할 것으로 예상; M2 증가율 목표치는 2014년 13%대에서 2015년에는 12%대로 다소 낮아질 것으로 전망
  - ※ M2 증가율은 올드 노멀에서 14~16%, 뉴 노멀에서 12~14%가 적합하다는 인식(중국사회과학원 李揚 부원장)이나, 이와 관련 학자들간 쟁점이 진행중, 특히 鄭新立(중국국제경제교류중심 부이사장) 등은 통화공급의 적절한 확대를 강조

○ 신실크로드 추진 전략이 2014년에 이어 2년째 강조

- 신실크로드 전략은 2013년 시진핑 주석이 제창한 것으로 중국서부, 중앙아시아, 중동, 유럽으로 이어지는 육상 실크로드(一帶)와 중국 동부연안, 동남아, 인도, 중동, 유럽을 잇는 해상 실크로드(一路)의 두 개의 루트를 포함
- 중국정부는 경제발전공간 최적화와 지역 균형발전정책 차원에서 신실크로드 전략, 광역수도권(京津冀) 통합발전정책, 장강유역경제권 정책을 추진하기로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언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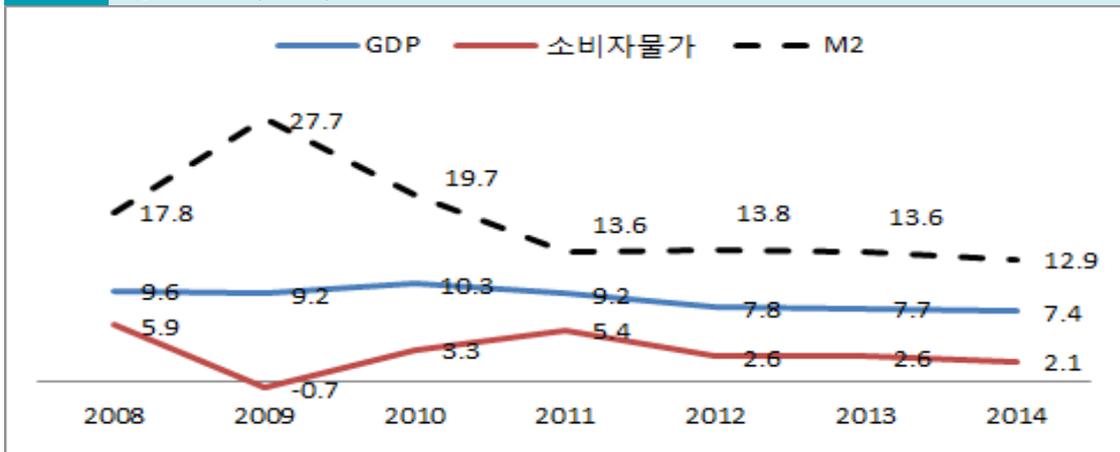
## 2. 주요 부문별 2014년 실적과 2015년 전망

### □ 성장과 물가, 신규 일자리 창출의 실적과 목표

- 2015년 경제성장률 목표치에 대해서는 7%가 대세로 등장
  - 2014년 경제성장률은 7.4%로 예상되면서 정부의 목표치인 7.5%에 근접
    - ※ 투자는 지방정부의 부채가, 수출은 선진권 경제의 불경기가, 소비는 시진핑정부의 정풍운동 등이 주요 부진 요인으로 등장
  - 분기별로는 1/4분기 7.4%, 2/4분기 7.5%, 3/4분기 7.4%, 산업별로는 3/4분기말 기준, 1차 산업 4.2%, 제2차 산업 7.4%, 제3차 산업 7.9%로 전년에 이어 서비스산업의 비중이 제조업을 상회

- 2014년 중앙경제공작회의를 전후로 국무원발전중심, 국가신식중심, 사회과학원, 금융권 등 대부분의 싱크탱크들이 7.0%를 건의
  - ※ 중국정부는 2011년 8%를 성장률 목표치로 제시한 바 있으며, 2012년~2014년간은 7.5%를 제시
  - ※ 중국정부의 2015년 경제성장률 목표치는 2015년 3월 개최되는 전인대에서 발표될 전망
- 세계은행, OECD, IMF, 골드만삭스 등은 2015년 중국경제성장률을 7.1~7.2%로 전망하고 있으며, 중국인민은행, 중국사회과학원은 각각 7.1%, 7%를 제시
- 한편, 경제성장률 목표치는 12.5 기간(2011~15) 7.0%에서 13.5 기간(2016~2020)에는 6.2% 전후로 다소 낮아질 전망

그림 1 중국 GDP, CPI, M2 추이(2008-2014)



자료: 국가통계국, 2014년 GDP는 추정치, CPI는 10월말 기준, M2는 9월말 기준

표 2 주요 기관들의 2015년 중국경제성장률 전망치

기관	2014년	2015년	비고
세계은행	7.4	7.2	2014.10
IMF	7.4	7.1	2014.10
OECD	7.3	7.1	2014.11
골드만삭스	7.4	7.2	2014.10
중국인민은행	7.4	7.1	2014.12
중국사회과학원	7.3	7.0	2014.12

자료: 각 기관 홈페이지

- 2015년 소비자 물가 목표치는 2014년보다 0.5% 포인트 낮아진 3%가 제시될 것으로 예상
  - 2014년 소비자 물가는 11월말 2%를 기록하고 있으며, 연간 2% 정도로 예상되면서 정부의 목표치인 3.5%를 크게 하회
    - ※ 식량의 안정적 공급에 따른 식품가격의 안정세와 유가 등 자원가격의 하락, 일부 제조업의 공급과잉 등이 주요인
  - 2015년 소비자물가 상승률로 골드만삭스사는 2.5%, 중국인민은행은 2.2%, 사회과학원은 1.9%를 각각 제시
- 중국정부가 중시하는 신규일자리 창출은 2014년과 마찬가지로 1,000만명이 목표치로 설정될 전망
  - 2014년 9월까지 창출된 신규일자리 개수는 1.082만명으로 정부의 연간 목표치인 1,000만명을 이미 상회, 연간 1,300만명 이상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
  - 그러나 신규 일자리중 비정규직 비중이 높고, 대졸 취업자의 실업난은 여전히 심각한 상태로 질적인 부분에서는 문제가 심각

**표 3** 중국 실업률과 신규 일자리 창출 추이

연도	임금지수	실업률	실업자	신규일자리
2010	13.3	4.1	908	1,168
2011	14.4	4.1	922	1,221
2012	11.9	4.1	917	1,266
2013	10.1	4.1	926	1,310
2014	-	4.1	-	1,082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

## □ 투자와 소비

- 내년도 투자 증가율은 16%대가 될 것으로 예상(중국사회과학원)
  - 2014년 10월말 기준, 투자 증가율은 15.9%로 당초 예상치인 19%를 크게 하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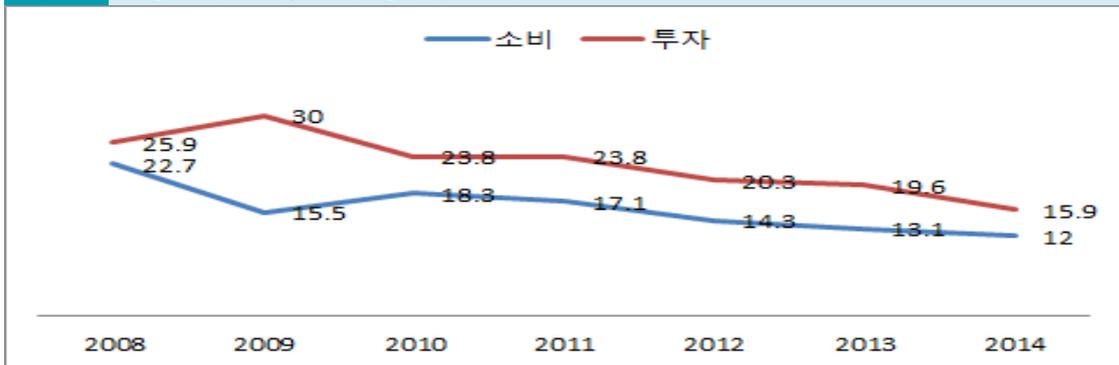
※ 국유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침체, 제조업 공급과잉, 지방정부의 투자 감소 등이 투자 부진의 주요인

※ 부동산 개발 투자는 14.0%로 전년동기대비 2.3% 포인트가 감소, 제2차 산업에 대한 투자도 13.4%로 전년동기대비 4% 포인트 감소

- 내년도 중국정부는 금년과 유사하게 투자구조 개선에 역점을 두고 기초 인프라, 전략적 신흥산업, 빈곤지역의 주거환경 개선, 농촌생산성 향상과 민생분야(교육, 의료, 양로 등), 중서부 지역 철도사업, 에너지 절약과 환경개선, 자체 브랜드개발과 핵심기술개발, 소수민족과 변방지역 등에 대한 투자를 적극 확대할 방침

- 교육, 의료, 도로, 공항 등 공공부문과 인프라에 대한 민간부문의 투자를 허용하고, 서비스산업에서의 민간자본 역할을 강조

그림 2 중국의 소비, 투자 증가율 추이



자료: 국가통계국, 2013년 4/4분기는 10월말 실적

○ 내년도 실질 소비증가율은 10.5%로 금년과 유사한 수준이거나 다소 낮아질 것으로 예상(사회과학원)

- 2013년 10월말 기준 소비증가율(사회소비품소매총액)은 12.0%로 전년동기 대비 1% 포인트 하락, 연초 예상치인 13%를 하회

※ 정부의 8항 규정과 정풍운동이 소비 부진으로 연결, 상품소비액은 전년동기대비 1.3% 포인트 감소한 반면, 음식업은 0.7% 포인트 증가

-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이 14% 이상 기록하여 소비가 활황 국면을 보이고 있는 품목들은 통신기기(26.4%), 약품(15.1%), 가구류(14.1%) 등이며, 7%

이하의 부진한 국면을 보이고 있는 품목들은 보석류(-1.7%), 체육·레저용품(3.8%) 등임.

※ 자동차(8.6%), 화장품(10.3%) 등은 전년보다 증가세가 다소 주춤

- 내년도 중국정부는 신형도시화 정책, 일자리 창출, 민생경제 지원 확대, 빈곤층 조세감면을 포함한 소득재분배 정책 등을 통해 소비의 안정적 증가를 도모할 방침
- 특히 새로운 유통수단으로 부상하고 있는 전자상거래 소비환경 조성과 현대물류체계 건설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방침

## □ 공업

○ 2015년 공업 성장률은 7.5~8.5% 구간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중국사회과학원 공업경제연구소)

- 2014년 10월말 기준, 공업 성장률은 8.4%로 전년동기대비 1.3% 포인트가 감소, 그중 채굴업은 4.8%, 제조업은 9.5%, 전력·가스·수도는 3.1%를 기록하여 각각 전년동기대비 1.6% 포인트, 1% 포인트, 3.7% 포인트씩 감소

- 생산량 기준 10% 이상의 고성장을 기록한 품목들은 플라스틱 원료(11.4%), 합성세제(11.5%), 강재(13.5%), 알루미늄재(18.6%), 대기오염방지설비(11.9%), 철도차량(10.9%), 발전설비(10.5%), 에어컨(13.3%), 이동통신기지국설비(12.7%), 교환기(17.6%), 팩스(16.9%), 인쇄기(10.7%) 등

- 전년동기대비 생산량이 감소한 품목들은 방직물(-0.3%), 신문용지(-10.4%), 암모니아비료(-1.8%), 보일러(-14%), 대형 트랙터(-1.0%), 소형 트랙터(-12.8%), 금속야련설비(-2.8%), 세탁기(-3.2%) 등

○ 내년도 제조업 분야에서의 핵심 정책은 과잉공급 산업의 구조조정과 전략적 신흥산업을 포함한 신성장 동력산업의 발굴, 환경친화적 생산시스템 조기 정착 등임.

- 경기가 침체되면서 공급과잉 산업이 철강, 시멘트, 석탄화공, 평판유리 등 전통제조업에서 자동차, 기계, 전기알루미늄, 태양광, 풍력발전, 다결정실리콘 등 첨단제조업으로 확대되는 양상

## □ 대외경제협력

- 내년도 수출과 수입은 금년과 유사한 수준 또는 약간 나아질 것으로 기대, 수출 증가 전망치는 6.6%, 수입 증가 전망치는 5.5%(상무부 연구원)
  - 2014년 11월말 기준 교역액은 3.9조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3.4%가 증가, 그중 수출은 2.12조 달러로 5.7% 증가, 수입은 1.78조 달러로 0.8% 증가에 그치면서 무역수지 흑자는 사상 최대치인 3,325억 달러를 기록
  - 수출입 모두 당초 설정되었던 목표치인 7.5%에는 크게 미달, 특히 수입의 경우 자원 가격의 하락과 가공무역의 위축이 감소의 주 요인

그림 3 중국의 수출입 추이(%)



자료: 중국해관통계

- 10월말 누계 기준, 국가별 수출구조를 살펴보면, 홍콩의 중계무역기능이 취약해지면서 홍콩에 대한 수출(-10.3%)이 큰 폭으로 감소, 한국에 대한 수출은 8.9%로 평균치를 상회
  - 미국에 대한 수출 증가율은 8.6%로 전년보다 상승세를 기록하였고, 베트남에 대한 수출이 26.8%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

표 4 중국의 주요 국가별 수출 추이(억 달러, %)

순위	국가	2013		2014(1-10)	
		금액	증감율	금액	증감율
1	미국	3,663	4.1	3,231	8.6
2	홍콩	3,901	20.8	2,845	-10.3
3	일본	1,487	-1.9	1,237	2
4	한국	907	3.4	823	8.9
5	독일	671	-3	599	9.9
6	네덜란드	602	2.1	530	9.8
7	베트남	485	41.8	498	26.8
8	영국	506	9.4	469	15.2
9	인도	484	1.3	444	10.1
10	러시아	495	12.4	443	10.3
총계		22,108	7.8	19,040	5.8

자료: 중국해관통계

○ 10월말 누계 기준, 국가별 수입구조를 살펴보면, 한국으로부터 수입액이 1,578억달러(전년동기대비 7.8% 증가)로 가장 크고, 일본, 미국, 대만 순

- 특히 주목을 요하는 부분은 대만으로부터 수입이 크게 위축되고 있다는 것으로 중대만 경제협력체제협정(ECFA) 체결을 계기로 급상승하던 대만의 대중국 수출이 2014년 급격히 위축되는 모습
- 일본으로부터 수입은 2013년 마이너스 성장에서 벗어나 2014년 3.7%의 증가율로 선회

표 4 중국의 주요 국가별 수입 추이(억 달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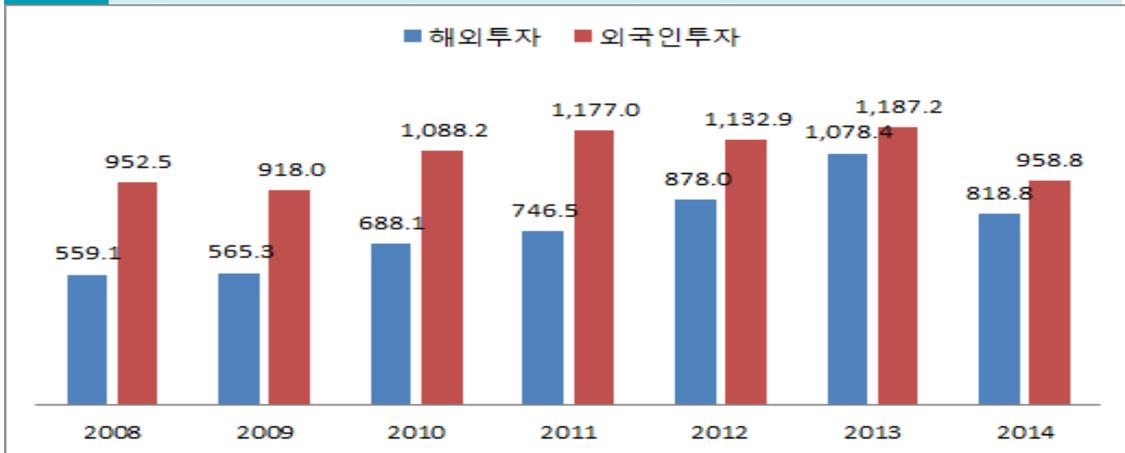
순위	국가	2013		2014(1-10)	
		금액	증감율	금액	증감율
1	한국	1,794	7.7	1,578	7.8
2	일본	1,591	-10.5	1,348	3.7
3	미국	1,443	12.9	1,249	7.5
4	대만	1,503	13.7	1,242	0
5	독일	938	1.9	872	12.8
6	호주	914	16.3	773	3.2
7	브라질	535	2.8	465	3.6
8	말레이시아	589	1.1	456	-3.9
9	사우디아라비아	533	-2.9	419	-6.3
10	러시아	394	-10.5	346	4.1
전체		19,415	6.8	16,280	2.3

자료: 중국해관통계

○ 내년에는 중국이 사상 최초로 자본 순유출국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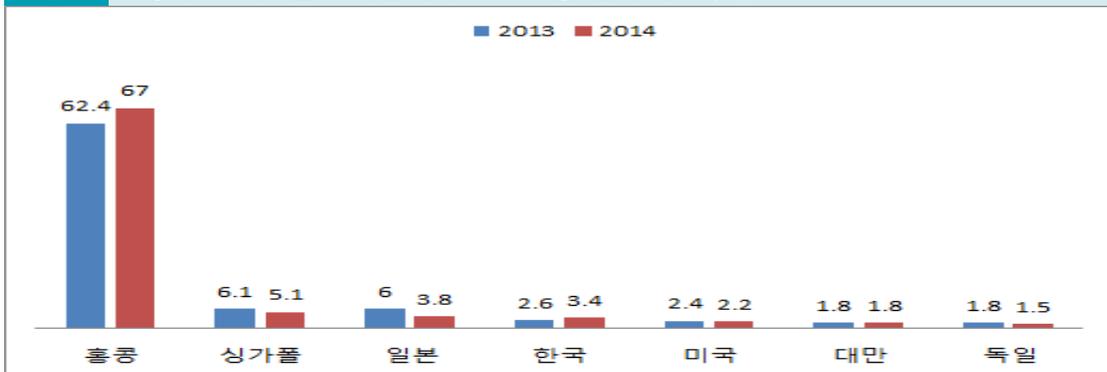
- 2014년 10월말 기준, 중국의 해외투자는 전년동기대비 17.8% 증가한 818.8억달러를 기록한 반면, 외국인직접투자는 전년동기대비 1.2% 감소한 958.8억달러를 기록하면서 양자간 격차가 축소되는 추세
- 중국정부는 외국인투자의 투자환경 개선과 해외투자에 대한 개방 확대를 주요 정책 목표로 설정하고 있으며, 특히 위안화 국제화와 기술도입 차원에서 대외개방을 적극 장려
- 내년도 대외투자는 10% 증가한 1,080억달러를 기록해 외국인직접투자와 유사한 규모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

**그림 4** 중국의 외국인직접투자와 해외투자 추이(억 달러)



자료: 중국 상무부통계, 2014년은 10월말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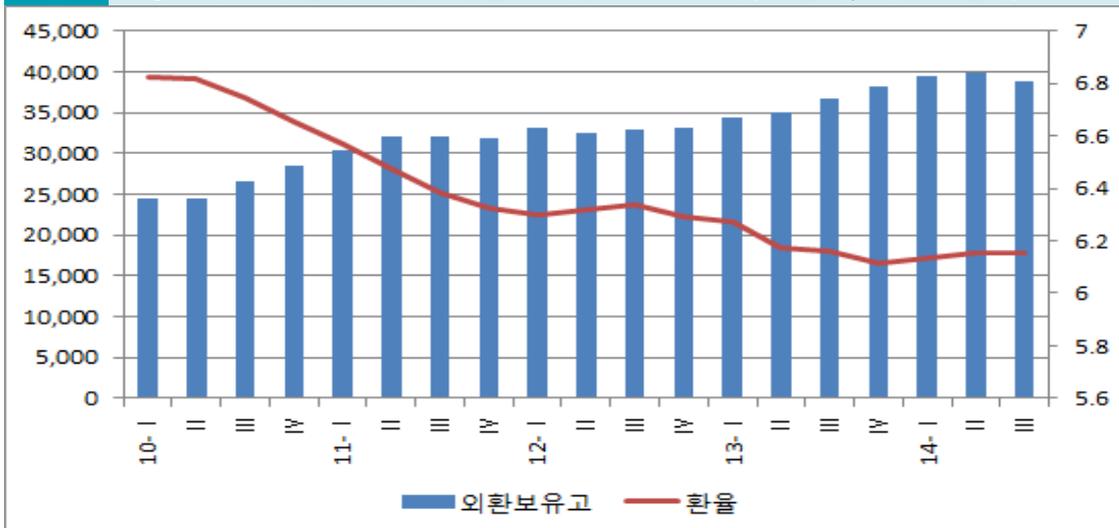
**그림 5** 중국의 국가별 외국인직접투자 비중 변화 추이(%)



자료: 중국 상무부통계, 2014년은 10월말 기준

- 2014년 10월말 기준, 한국이 중국 전체 외국인직접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4%로 전년대비 0.8% 포인트가 증가
  - 홍콩의 투자 비중은 67%로 전년대비 4.6% 포인트가 증가한 반면, 일본의 투자비중은 2.2% 포인트가 감소, 대만과 미국은 유사한 수준
  
- 위안화 환율은 소폭 절상과 함께 변동 폭이 커질 것으로 예상
  - 위안화 환율은 중국정부의 개입으로 2013년말 6.116에서 2014년 5월 6.164로 0.8% 절하되었으나, 이후 절상 추세로 이어져 10월말에는 6.144로 연초대비 0.6% 절하
  - 2014년 9월말 기준, 외환보유고는 3조 8,877억 달러를 기록, 지난해 연말 대비 664억 달러가 증가, 그러나 금년 6월말에 비해서는 1,055억 달러가 감소
  - 최근 러시아 루블화 폭락 등 국제금융시장이 불안해지면서 중국당국의 위안화 환율에 대한 개입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위안화 국제화정책도 계속 강화될 것으로 전망

그림 6 중국의 대미 달러 위안화 환율과 외환보유고 추이(억 달러, 위안화/달러)



자료: 국가통계국

### 3. 시사점

#### □ 내년도 중국경기 하방 대비와 함께 한중 FTA 활용 방안 강구

- 중국경제가 4년째 하락세를 보이면서 전형적인 연착륙의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향후 상당 기간 이러한 추세가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필요
  - 대만이나 일본과 달리 아직까지 한국은 중국 수입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점유율에서도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는 등 중국시장에서 선방을 하고 있는 편
  - 그러나 내년도 수출 실적이 금년도보다 더 나빠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대중국 수출에서 가공무역 비중이 높은 품목들은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
  - 내년도 국제금융시장 불확실성 제고와 함께 위안화 환율 변동폭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비책도 필요
- 중국의 내수활성화 정책에 잘 편승하여 대중국 수출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
  - 신형도시화 건설과 농촌 소득증대 도모 정책으로 인해 중국의 중소형 도시의 소비가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를 활용할 구체적인 내수시장 조사와 진출 전략이 필요
  - 중국정부가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교육, 의료, 도로, 공항 등 공공부문과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민간기업에 적극 개방할 예정이므로 중국 민간기업과 전략적 제휴를 맺고 동 분야에 진출하는 방안을 강구함이 바람직
  - 백화점, 마트 등 전통적 유통시장은 침체기를 맞고 있는 반면, 전자상거래가 새로운 유통수단으로 부상하는 등 중국의 소비행태의 변화에 대한 대응책이 필요
  - 중국정부는 첨단기술은 물론 일반 소비재에 대해서도 수입을 적극 장려하고 있는 만큼 최근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가구, 의료, 화장품, 양

로, 교육 등과 관련된 시장에 크게 주목할 필요

- 중국정부의 전략적 신흥산업 육성과 에너지 절약과 친환경과 관련된 설비, 소재, 부품에 대한 수입수요도 크게 늘어날 전망
  - 중국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정부들도 산업구조 고도화 차원에서 첨단기술 도입을 적극 강조하는 상황
  - 한중 FTA를 적극 활용하여 지방정부들과 기업들이 발주하고 있는 환경 관련 시설과 설비 발주에 적극 참여하는 방안을 강구
  - 중국 기업과 지분 제휴, 공동연구 개발, 조달과 판매에서 전략적 제휴 등 다양한 협력 형태를 구사함이 바람직
- 한중 FTA와 한류, IT 를 융합하여 중국 내수시장을 개척
  - 제조업과 문화산업, 전자상거래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제품과 판매 통로를 개척
  - 식품, 의료, 패션 등에서 중국인들의 감성에 호응하는 신제품 개발

#### □ 중국정부의 지역발전 전략 편승과 중서부지역 공략이 관건

- 내년도 중국정부는 핵심 지역정책으로 “一帶一路(신실크로드; 중서부)”, “광역 수도권 개발정책(京津冀)”, “장강경제권(장강 유역)”의 유기적 발전을 강조
  - 동 지역에 대한 전략적 거점을 확보하고 이를 중심으로 연구개발, 제조, 물류, 유통, 금융 등에 대한 부가가치 사슬구조를 확립
- 동부지역과 달리 아직도 10%대의 고도성장을 구사하는 중서부 거점 지역과의 경제협력 플랫폼을 구축하고 양국간 산관학 협력을 강화할 필요
  - 고속철시대를 맞이하여 유통, 물류 거점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부 지역의 정조우, 우한, 창사 등 도시와 서부지역의 시안, 충칭, 청두와의 경제협력 플랫폼을 건설



# 한중 FTA가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전략

주력산업연구실 실장 조철

## □ 한중 산업관계의 변화와 시사점

○ 한국의 주요 산업에서 중국 세계 최대 생산 대국으로 부상

- 중국은 대부분의 산업에서 생산이 세계 1위를 차지할 정도로 급속한 양적 성장 달성
- 섬유 등 경공업제품뿐만 아니라 가전, 자동차 및 선박, 공작기계 등 기계류, 철강 및 에틸렌 등 소재 등 다방면에 걸쳐 세계 1위를 기록

표 1 주요 산업의 세계 생산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

자동차	선박 인도량	조강	공작기계	가전	에틸렌
22.8%	37.6%	43.8%	30.0%	34.9%	11.0%

주 : 자동차, 가전은 2012년, 기타 산업은 2011년 통계

○ 품목 내 분업으로 한중 분업관계의 심화

- 한국의 대중 수출과 수입 품목의 유사성이 매우 심해 무역거래에 있어 산업 내 무역이 확대되고 있는 양상
- 전자, 자동차, 화학 등의 산업이 한중 교역 10대 품목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액정디바이스, 메모리반도체, 자동차부품, 기타무선통신기기부품 등은 품목단위에서도 일치

- 한중간의 교역이 과거 산업간 분업에서 산업 내 분업으로 다시 품목 내 분업으로 심화되어가는 양상
- 이는 한중의 무역구조가 보다 중고기술품 중심으로 전환하고 있고, ICT 및 중고기술편야에서 상호 수평적 분업구조를 형성해나가는 것으로 판단
- 양국간 산업구조가 유사해지고 있지만 한중간 교역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경쟁에 의한 새로운 분업구조가 형성되어왔음을 반증

**표 2** 한중 주요 수출입 품목(2013년)

순위	대중수출			대중수입		
	품목	금액	비중	품목	금액	비중
	총 계	1,458	100	총 계	831	100.0
1	액정디바이스	177	12.1	메모리반도체	30	3.6
2	메모리반도체	98	6.7	기타정밀화학원료	28	3.4
3	프로세서와 콘트롤러	77	5.3	기타배전 및 제어기	26	3.1
4	자동차부품	56	3.8	액정디바이스	26	3.1
5	경보신호기부품	54	3.7	기타전선	19	2.3
6	기타무선통신기기부품	50	3.4	휴대용 컴퓨터	17	2.1
7	파라크실렌	40	2.7	기타무선통신기기부품	16	1.9
8	제트유	33	2.3	기타개별소자반도체	15	1.8
9	인쇄회로	24	1.6	기타 철 구조물	14	1.7
10	기타전자응용기기	23	1.6	자동차부품	14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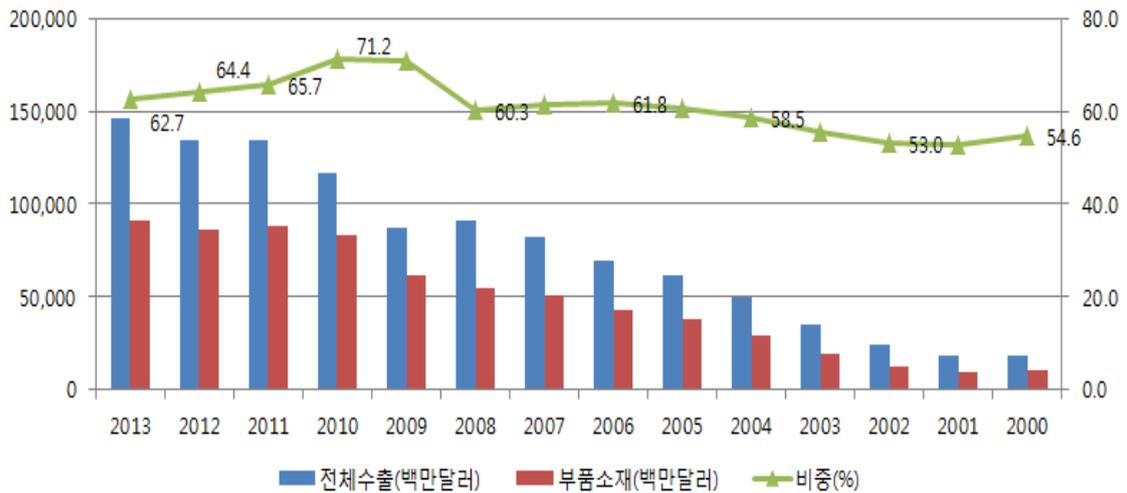
자료 : 한국무역협회, MTI 코드 기준(단위 : 억 달러, %)

- 부품소재 중심의 대중 수출구조는 크게 변하지 않고 있음.
  - 한때 71%를 상회했던 대중 수출에서 부품소재가 차지하던 비중은 2013년 63% 수준까지 하락하였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
  - 조립완제품은 중국에서 생산하고 부품소재를 수출하는 구조 유지
- 우리 산업에서 차지하는 중국 부품소재의 중요성도 크게 제고
  - 우리 대중 수입에서도 부품소재가 차지하는 비중이 54%에 달하고 있고,

2000년대 초반에 비해 크게 높은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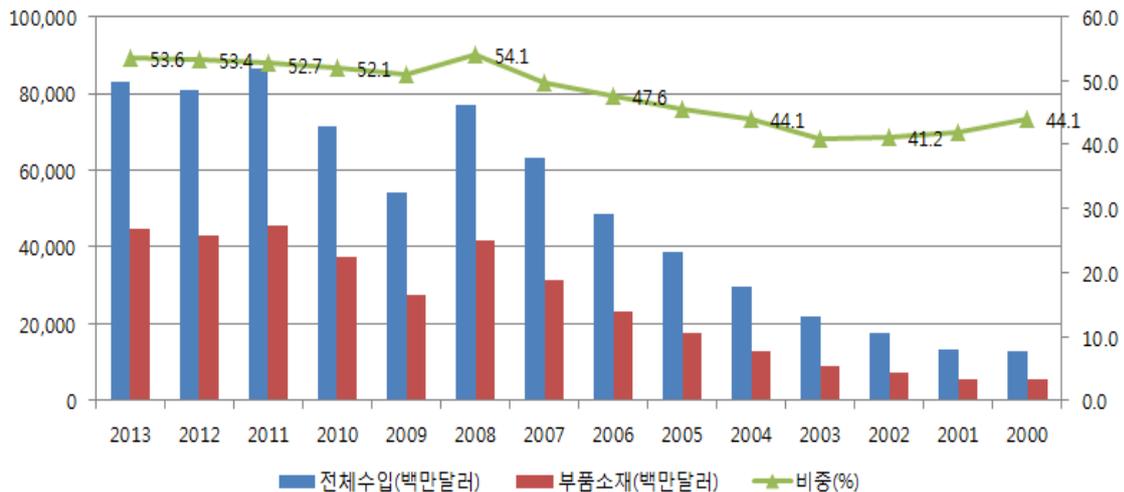
- 우리 산업의 생산 및 수출을 위해서도 중국의 부품소재가 중요

**그림 1** 한국의 대중 수출에서 부품소재가 차지하는 비중 변화



자료 : 무역협회 및 기계산업진흥회, 일반 무역 및 부품소재 무역통계

**그림 2** 한국의 대중 수입에서 부품소재가 차지하는 비중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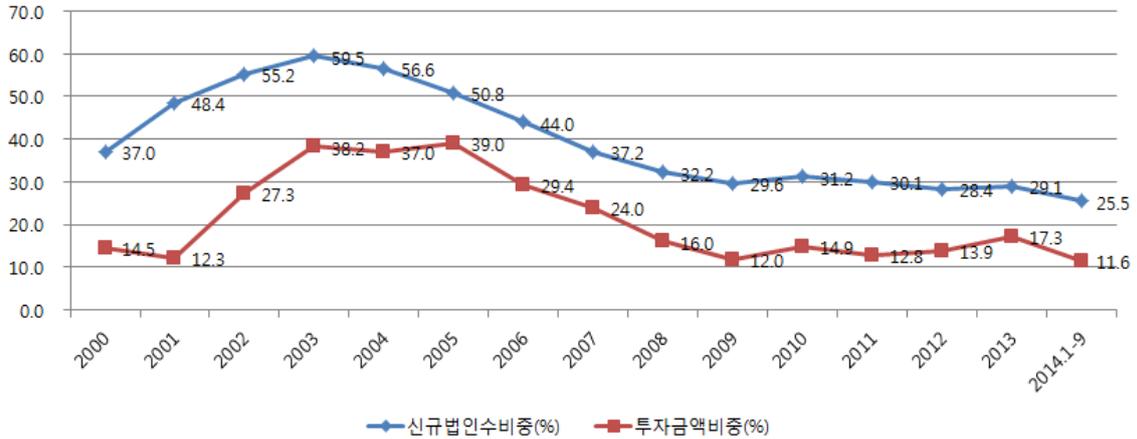
자료 : 무역협회 및 기계산업진흥회, 일반 무역 및 부품소재 무역통계

○ 중국에 집중되고 있는 우리의 해외투자

- 우리의 대중 투자는 한때 신규법인 수 기준으로 60%에 달한 적이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여전히 신규투자법인 수가 최고 높은 지역

- 중국은 우리의 생산기지로서도 매우 중요

**그림 2** 한국 전체 해외투자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변화



자료 : 무역협회 및 기계산업진흥회, 일반 무역 및 부품소재 무역통계

○ 중국의 대한국 투자 확대 가능성

- 2012년 말 기준 중국의 대한 투자 규모는 누계기준으로 44.6억 달러에 불과하여 한국의 대중 투자에 비해 매우 취약한 수준
- 이는 국내 전체 외국인 투자금액의 2.3%에 해당되는 수치로서 우리 외국인투자에 있어 중국이 크게 중요하지 않는 상황
- 최근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해외투자 장려(走出去) 정책으로 대한 투자도 증가할 가능성 존재
- 일방적인 한국의 투자에서 벗어나 중국의 투자도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중국의 산업 발전정책 추진에 따른 한중간 분업 및 경쟁 심화

- 양국 산업의 구조고도화 진전에 따라 기존 한중간 수직적 분업구조에서 같은 산업 및 품목 내에서 특성화하는 수평적 분업구조로 전환 가속화
- 중국은 모든 산업에서 신제품 및 신기술 개발을 통해 구조고도화 추진

및 환경 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모색하여 한국과의 경쟁이 보다 심화

**표 3** 중국 12.5 계획 중 주요 업종의 발전방향

업종	주요 내용
자동차	고효율의 전동 및 구동, 소재와 구조의 경량화, 자동차기능혁신
조선	대형LNG 및 LPG선, 원양어선, 호화유람선, 해양플랜트
철강	고속철도용 및 고강도 기계용 철강, 규소강, 청정철강생산
석유화학	첨단석유화학제품, 대형 정제일체화 기지, 원재료의 다원화
섬유	첨단기술 섬유 및 차세대 기능성, 차별화 섬유의 산업화

자료: 산업연구원

○ 중국의 신성장동력산업 육성에 따른 경쟁관계 심화와 협력 가능성

- 중국의 전략형 신흥산업은 우리의 신성장동력산업과 유사하여 향후 한중 간 새로운 산업분업구조 형성 필요
- 중국의 전략형 신흥산업은 에너지절약 및 환경보호, 차세대 정보기술, 생물, 첨단장비제조, 신에너지, 신소재, 신에너지자동차 등으로 산업구조 고도화 및 경제성장의 핵심 엔진으로 육성 모색
- 중국 전략형 신흥산업 GDP 비중 목표(%) : (2010)2~3% → (2015) 8% → (2020)15%
- 원천기초기술차원에서는 군사 및 우주기술을 기반으로 한국보다 앞선 분야도 존재
- 신산업분야에서 공동기술개발 및 시범사업 추진, 표준 설정 등 다양한 협력 활동이 가능

○ 한중은 세계적인 생산기지로서 경쟁과 협력의 필요성이 동시에 존재

- 공급과잉 등에 따른 구조조정 문제는 세계적인 생산기지인 한중이 협력하여 해결하거나 서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필요

- 세계적인 표준설정 등에 있어서도 한중의 생산능력 및 시장기반을 바탕으로 협력하면 그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

○ 높은 무역 및 투자 의존에 따른 협력의 필요성 증대

- 한중은 무역분야에 있어 상호 의존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이를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긴밀한 협력 관계 구축이 필요
- 우리 기업의 대중국 투자 및 생산은 기업 전략 상 매우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어 한중 협력을 통해 이를 발전시키는 것이 요구됨.

○ 정부주도의 성장정책과 협력 가능성

- 중국 산업발전에 정부정책이 매우 중요하며 한중 정부간의 협력을 통해 발전기회 발굴
- 협력을 통해 사전에 중국정부의 정책수요를 인지하는 것이 기업들의 진출에 매우 중요

○ 협력에 대한 기대와 경쟁에 대한 우려 공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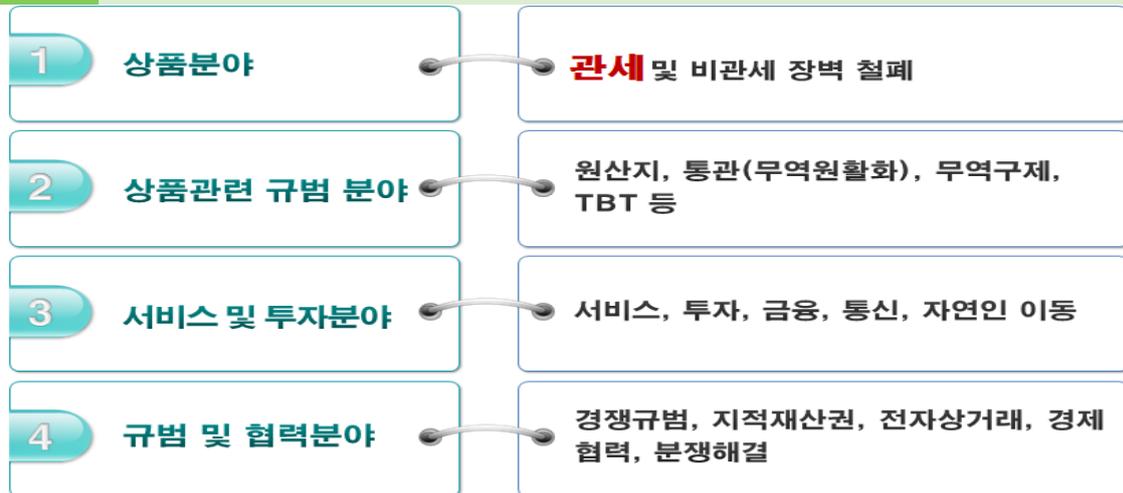
- 산업구조의 유사성으로 경쟁이 심화되고 있어 중국에 대한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
- 그렇지만 중국은 우리의 최대 수출대상국 및 투자처로서 그 중요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협력의 필요성도 높은 상황
- 이에 따라 우리 기업들도 관세 양허 부문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반면 비관세장벽이나 투자 및 산업협력 등에 관심

□ **한중 FTA가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

- 한중 FTA는 관세양허뿐만 아니라 비관세장벽, 상품관련 규범, 서비스 및 투자,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합의 도출

-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서 관세 양허뿐만 아니라 여타분야도 매우 중요

그림 4 한중FTA의 기본구조



자료: 산업연구원

#### ○ 관세철폐의 효과

- 중국의 관세 철폐
  - ※ 우리 기업의 수출비용 절감 혹은 우리 제품의 가격 경쟁력 향상
  - ※ 중국제품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경쟁하는 타국 제품(특히 일본제품)에 대해 경쟁우위 확보
- 한국의 관세 철폐
  - ※ 부품소재를 수입하는 우리 기업의 비용 절감 및 가격 경쟁력 강화
  - ※ 우리 시장에서 중국 제품의 가격경쟁력 향상 및 우리 기업에 대한 위협
- 상호 민감 품목은 양허 제외 및 장기 철폐로 영향 최소화
  - ※ 중국은 승용차, 일부 자동차부품, 석유화학의 PX, 일부 일반 기계 등 우리의 주력 수출품 양허 제외
  - ※ 우리는 공급과잉 및 중국 내 생산제품(자동차 등), 경쟁력 약화품목(섬유, 목재류 등) 등에 대해 양허 제외 및 장기 철폐

○ 비관세장벽 관련 조치

- 주요 내용

- ※ 수입허가 관련 신규 및 수정 조치 공표 의무(미 공표시 적용 제외)
- ※ 비관세조치 시행 전 충분한 유예기간 확보
- ※ 비관세조치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작업반 설치
- ※ 중개인을 통한 해결방안 마련 명문화 등 비관세장벽 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영향 및 평가

- ※ 중국정부의 불투명성이 문제여서 우리 기업들이 사전정보 수집에 많은 비용 지불
- ※ 수입 등 비관세관련 정책 변화를 미리 알 수 있어 이에 대한 사전 준비가 가능
- ※ 지속적으로 비관세 장벽 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 비관세장벽으로 인한 기업의 부담을 줄여 줄 수 있어 수출에서 이점 존재

○ 통관 관련 조치(무역 원활화)

- 주요 내용

- ※ 48시간 내 통관원칙 및 부두직통 관제
- ※ 세관집행의 일관성 증진
- ※ 상품 반출에 관해 전자적 서류 제출
- ※ 특송 화물 서류 최소화

- 영향 및 평가

- ※ 우리 수출기업의 비용절감 및 원활한 수출 확대

○ TBT 관련 조치

- 주요 내용

- ※ 국제공인시험성적서 상호 수용
- ※ 시험 및 인증기관 설립지원

- ※ 시험샘플 통관 원활화
- ※ 기술규정 제정 및 개정 안에 대한 의견 제시기간 명확화

- 영향 및 평가

- ※ 보다 원활한 수출 확대가 가능
- ※ 국내 시험인증기관의 중국 진출 촉진
- ※ 지속적으로 비관세 장벽 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 수출관련 검사에 필요한 비용 및 기간 단축

○ 투자 관련 조치

- 주요 내용

- ※ 투자의 네거티브 자유화 방식(원칙적 개방, 미개방분야 열거)에 따라 후속협상 진행 합의
- ※ 중국정부 내 우리 기업 애로 해소 담당기관(중앙 및 성 단위) 지정

- 영향 및 평가

- ※ 우리 기업의 대중국 투자 활성화
- ※ 우리 기업의 중국 내 경영활동 원활화

○ 경쟁법 관련 조치

- 주요 내용

- ※ 투명성, 절차적 공정성, 비차별 원칙 등 경쟁법 집행 원칙 보장
- ※ 공기업 등에 대한 경쟁법 적용 의무
- ※ 경쟁 당국간 협력 의무

- 영향 및 평가

- ※ 우리 기업에 대한 차별적 법 집행 방지
- ※ 경쟁법 관련 정책에 대한 사전 인지를 통해 대응 가능

○ 이밖에도 전자상거래, 지적재산권, 비자발급, 산업협력 챕터 등이 우리 산업의 중국 진출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

**표 4** 한중 FTA의 기타 주요 합의사항 및 우리산업에 미치는 영향

④ 주요 내용	④ 영향 및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자적 상거래에 관한 무관세 원칙 관행 유지 등 전자상거래 촉진 기반 구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국 소비자들의 한국 고급 전자제품, 패션 의류 등 직접구매 증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유명상표 보호강화</li> <li>실용신안권 분쟁 시 근거자료 제출 요구</li> <li>손해액 입증 용이성 제고</li> <li>지적재산권 침해 물품의 압류 및 폐기 명문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국 기업과의 지적재산권 분쟁 방지</li> <li>우리 기업의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재원 최초 2년 체류기간 및 복수 비자 발급 확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우리 기업의 비용 절감 및 투자 확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다양한 협력을 포괄하여 양국간 협력 제도화(철강, 중소기업, 정보통신, 섬유, 관광·문화, 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협력사업을 통해 양국간 공동 이익 창출</li> <li>사전 정책정보 수집 등 기업 문제 해결</li> </ul>

자료: 산업연구원

- 양국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직접적으로 가격 경쟁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관세 양허 부문은 주력산업부문에서 제한적 개방
  - 그러나 중국도 다양한 산업부문에서 관세철폐가 추진되고 있어 이들 분야의 수출 확대 가능
  - 제조업 부문에서는 우리의 개방수준이 높아 경쟁력이 강화되고 있는 중국과 국내시장에서 경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우려
- 비관세장벽, 투자, 경쟁법, 지적재산권, 통관, 전자상거래, 경제 및 산업협력 등 다양한 조치들이 관세 양허보다 우리 산업 및 기업에 더 큰 이익을 제공
  - 기업들은 중국과 무역거래뿐만 아니라 현지투자 및 생산, 지적재산권 거래 등 다양한 방식으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조치들이 기업의 이익을 증진
  - 중국과의 거래 및 투자, 중국 내 생산 등에 대한 불합리한 조치 등을 사전에 방지하거나 주요 정책 등에 관련된 정보를 사전에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

## □ 우리산업의 발전과제와 대응전략

- 중국의 구조변화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FTA가 체결되어 우리 산업과의 경쟁은 더욱 격화될 것으로 예상
  - 중국이 시도하고 있는 질적 변화는 현 단계 우리 산업이 점유하고 있는 부분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조변화를 시도하려는 방향성과 일치
- 중국의 시장구조에서도 질적 변화가 발생할 것이고 이러한 시장변화는 FTA를 통해 국내기업이 중국 내수시장을 침투할 기회 제공
  - 중국의 소득이 증대되고, 사회보장제도가 확충되며, 저탄소경제 및 소비 중시 발전전략이 추진됨에 따라 중국 내수시장이 큰 폭으로 변화
- 향후 대중국 투자는 생산기지로서의 의미보다 중국 내수시장 침투전략적 요인이 더 크게 작용
  - 임금인상 등 중국의 생산여건이 악화되고 있어 대중국 투자기업들은 가공무역에 의한 해외수출보다 내수시장 침투에 더 주력해야 생존 가능
  - 한중 FTA를 통한 각종 투자 및 협력관련 조치는 우리 투자기업들에게 좋은 기회 제공
  - 부품소재의 수출 확대를 위해서도 중국 투자 우리 기업의 중국 내수시장 공략이 중요
- 중국정부의 구조고도화 정책에 따라 보다 세부적인 부품소재뿐만 아니라 관련 장비, 기술, 관련 생산성서비스 등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대 예상
  - 국내 관련 업체들에 대한 대형화, 전문화를 적극 추진해 중국시장에서 선진국 기업들을 추월하는 전략을 구사할 필요
  - 중국기업들의 대형 물량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국내의 중소 부품소재업체를 중견기업(브랜드 보유)으로 육성하는 것도 시급

- 한중 FTA를 통해 시장이 개방된 품목 중 향후 수출 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파악하여 중국시장 적극 공략
  - 현 시점에서 우리의 주력 수출품목이 아니어서 중국에서 시장을 개방한 부문이 존재
    - ※ 화장품, 헬스제품, 소형고급가전 등은 그 좋은 예
- 한국 모기업과 중국 현지기업 간 생산영역에서 부가가치 사슬구조와 연계하여 역할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 마련
  - 高(고부가가치), 輕(경량제품), 小(소형)를 한국에서 특화하고, 대신 중국에서는 조립과 유통, 판매, A/S 등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여 한국계 기업의 중국 현지화
  - 중국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품질, 디자인, 기능,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차별화 시도
- 비관세관련 각종 조치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신속한 후속 조치 추진
  - 네거티브 투자 자유화 방식에 대한 후속협상 등을 빠르게 추진
  - 중국 정부 내 우리 기업 애로 해소 담당기관 지정 실시
  - 비관세조치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작업반 설치
  - 국내 시험인증기관의 중국 진출 지원
  - 각종 업종별 협력 위원회 등 설립
- 각종 조치들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 지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체계 수립
  - 중국이 추진하는 각종 정책들이 한중 FTA협상 결과와 배치되지 않는지를

조사 및 분석하는 기능 마련(수입허가, 비관세조치, 경쟁법 적용, TBT, 무역원활화 등)

- 우리 정부차원에서 기업의 애로를 청취하여 중국 정부에 전달할 수 있는 채널 설립
- 국책연구기관, 기업, 정부 등이 공동으로 매년 중국의 비관세관련 조치들에 관한 조사 및 분석하여 중국 정부에 시정을 요구



## 국무원 수입 장려 조치 발표

- 2014년 10월 23일, 중국 국무원판공청은 무역수지 균형과 외환보유고 관리 차원에서 «수입 확대를 위한 몇 가지 의견(关于加强进口的若干意见)»(국발[2014]49호)을 발표

### □ 요강 제정 배경

- 각 성(省), 자치구(自治区), 직할시(直辖市) 인민정부, 국무원 각 부처, 직속 기관:
  - 적극적인 수입 확대 전략을 추진하여 기술, 상품, 서비스 수입을 확대하는 것은 효과적인 공급 강화, 국내 생산과 생활 수요 충족, 제품 품질 제고, 창업혁신, 경제구조 업그레이드에 유리함.
  - 또한, 외환 보유고를 합리적으로 유지할 수 있고 국제수지 평형을 촉진하며 개방과 협력 수준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음.
  - 국무원의 동의하에 수입 확대에 대해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시함.

### □ 선진기술장비와 핵심 부품 등에 대한 수입을 지속적으로 지원

- «수입 지원 기술 및 상품 목록(鼓励进口技术和产品目录)» 수정판을 조기 제정

- 금융기관들은 수입에 대한 신용대출 지원 강도를 높이고 선진 기술 장비, 핵심 부품 등에 대한 수입 확대를 지원
- 리스기업들이 수입 설비 용자 임대 업무를 추진하는 것을 적극 지원

### □ 자원형(资源性) 상품의 수입 안정화 도모

- 국가 저장 체계를 개선하고 기업의 상업용 저장을 지원
- 기업의 해외투자를 적극 지원
- 대외경제무역 발전전문기금 등을 활용하여 해외 에너지자원을 개발하는 것을 지원
  - 개발 자원의 본국 운송, 에너지자원 공급 안정, 시장안정을 도모
- 효과적인 관리의 전제하에 재생 에너지 수입을 적절히 확대

### □ 일반 소비재의 합리적 수입 증가를 장려

- 관련 국가와 수산물, 과일, 소고기와 양고기 등 제품에 대해 검역 협의를 체결하는 것을 적극 추진하고 자격을 갖춘 가공기업과 상품에 대한 등록제를 적극 추진
- 조건을 갖춘 국내 유통기업들이 수입과 국내 유통 업무를 통합 조정하여 중간 단계를 간소화하는 것을 지원
- 국내 상업 기업들이 해외 브랜드를 대리경영하는 것을 지원

### □ 서비스 무역에 대한 수입을 적극 장려

- 국내에서 수요가 많은 자문, 연구개발 설계, 에너지 절약과 환경보호, 환경 서비스 등 지식, 기술 집약형 생산성 서비스 수입 및 해외여행을 적극 장려

- 인원 교류 확대, 상호 자격증 인정, 산업표준 제정 등에 대한 국제 협상과 협력을 강화
- 서비스 무역 특징에 부합되는 항구 통관관리 모델을 구축하고 개선

#### □ 수입 절차 관리 간소화

- 자동차 브랜드 판매 관련 규정을 조정하고 중국(상해) 자유무역 시범구에서 자동차 병행수입(Parallel Import)시범 사업을 우선적으로 진행
- 자동수입허가화물 종류를 시기에 따라 조정하고 자동수입허가관리 상품에 대한 무서류 통관 시범을 추진
- 해관의 세금징수 관리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 □ 수입시 편의성 제고

- 수입화물에 대해 24시간 통관을 진행하고 명절과 휴일에는 예약 통관제를 시행
- 경진하(京津冀), 장강 경제벨트(长江经济带), 광둥성(广东省) 해관 구역 통관 통합조정 개혁을 토대로 전국 해관 통관 통합조정 개혁 사업을 가속화
- 검역 검사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제3자 검역검사 인증 결과 인정과 표준에 대한 국제적 상호인증제를 적극 추진하며 검역검사 시간 단축을 도모

#### □ 수입 촉진 플랫폼을 적극 개발

- 국가 수입 촉진 개혁 시범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벌크상품 거래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을 지원하며 수입 플랫폼을 개선
- 시범 경험을 바탕으로 공정경쟁 원칙에 따라 해외전자상거래에 대한 발전 지도의견을 조속 제시

- 해관의 특정 관리감독 구역과 장소를 지정하여 관련 상품에 대한 수입을 적극 장려
- 수입 박람회와 상담회 개최를 조직하고 지원
- 수입 촉진을 위해 인터넷 정보플랫폼을 적극 활용하고 시장 정보 제공 등 수입 활성화 정책에 대한 홍보 강화

#### □ 다자간 협력에 적극 참여

- “一帶一路(실크로드 경제벨트와 해상 실크로드)” 건설 가속화와 함께 중국과 변경 국가들 간의 비교우위를 바탕으로 한 협력 가능성을 발굴하고 협력 영역을 확대하며 조기에 성과를 가시화
  - 중국내 기업들이 인접 변경 국가에서 가공생산에 투자하는 것을 지원하고 가공 상품에 대한 수입을 확대
- 서비스 무역 협력 협의를 적극 추진하고 대외경제무역 협력 수준을 제고
- 대내외 민간기업간 다자간 무역협력체제를 강화하고 대내외 무역촉진기관과 상회간의 교류를 활성화
  - 기업의 대외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무역협력 기회를 확대

#### □ 각 지역, 관련 부처들은 성과 가시화에 주력

- 행정심사를 간소화하고 근무체제를 개선하여 기업들의 현안과 문제점을 적극 해결하는데 노력
- 관련 부서는 수입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시행 규정과 기한을 조속히 제정하여 2014년 연내에 가시적 효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함.
- 상무부는 정책간 조율과 현지 실사를 통해 상술의 각항 정책 조치들이 잘 시행될 수 있도록 독려



### □ 10월 중국 공업 부가가치 7%대로 하락

- 2014년 10월 중국 공업 부가가치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7.7%로 전월대비 0.3% 포인트 하락, 그러나 전년 동기 증가율이 10.0%였음을 감안하면 침체가 심각한 상태
  - 그중 광업은 4.7%, 제조업은 8.5%, 전력·가스·수도는 2.9%를 각각 기록, 제조업과 전력·가스·수도 부진이 심각
  - 1~10월 소유제별로는 국유기업 5.2%, 집체기업 2.2%, 주식제기업 8.3%, 사영기업 10.5%, 외자기업 6.6%의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을 각각 기록하여 소유제별로 차별이 큰 편
  - 1~10월 지역별로는 북경 6.5%, 상해 4.7%, 광둥 8.4%, 요녕 6.0%로 동부지역과 동북3성은 부진한 반면, 중경 12.7%, 하남 11.1% 등 중서부지역은 고성장세를 유지
- 부품소재, 기계설비, 가전제품 등 대부분이 부진한 상태를 시현
  - 소재산업에서는 방직(-1.0%), 선철(-3.1%), 조강(-0.3%)이 마이너스 성장을 보인 반면, 에틸렌은 11.0%로 고성장세 유지
  - 기계설비에서는 대기오염방지설비가 정부공사 발주가 완료되면서 -4.6%의 감소

율을 기록, 소형트랙터도 -17.0%로 금년들어 지속적인 감소율을 기록

- 자동차는 6.8%로 전월보다 상승세를 보인 반면, 조선은 7.3%로 성장세가 둔화
- 전자에서는 컬러TV(-5.5%), 컴퓨터(-3.8%), 세탁기(-3.6%) 등이 마이너스 성장세를 보인 반면, 반도체(14.3%), 에어컨(8.3%)은 비교적 높은 성장률을 기록

○ 소매업은 11.7%로 전월대비 0.2 포인트 하락한 반면, 음식숙박업은 9.7%로 전월대비 1.0% 포인트 상승

-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로 택배업무가 폭증하면서 우편업은 30%대의 고성장세를 지속

**표 1** 중국의 주요 업종별 생산 동향 (전년동기비, %)

업종별	2013년			2014년					
	상반기	3/4분기	연간	상반기	3/4분기	8월	9월	10월	
공업 전체	9.3	9.6	9.7	8.8	8.5	6.9	8.0	7.7	
섬유	섬유사	8.8	7.5	7.2	8.7	8.0	6.1	3.6	1.7
	방직	9.0	7.2	4.6	3.0	2.7	2.1	0.5	-1.0
	화학섬유	5.8	7.5	8.1	7.5	7.3	3.6	3.3	5.9
화학	에틸렌	4.6	6.4	8.5	5.3	7.5	14.2	14.1	11.0
	플라스틱원료	7.8	10.3	11.0	11.5	11.4	14.9	9.2	6.7
	플라스틱제품	8.2	8.8	8.0	6.4	7.8	7.9	7.2	6.3
철강	선철	5.7	6.9	6.2	0.5	0.4	0.2	-0.5	-3.1
	조강	7.4	8.0	7.5	3.0	2.3	1.0	0	-0.3
	강재	10.2	11.7	11.4	6.4	5.0	2.4	1.7	2.0
비철금속	10.0	9.8	9.9	5.4	6.6	9.5	8.2	4.8	
기계	금속절삭기계	-12.4	-9.2	-2.0	5.0	5.0	4.4	4.1	-1.4
	소형 트랙터	8.4	5.9	4.9	-11.1	-12.6	-17.1	-14.3	-17.0
	대기오염방지설비	8.0	4.0	-3.1	14.2	14.0	23.1	13.0	-4.6
	발전설비	-5.1	-3.3	-4.8	2.9	12.0	26.3	7.9	-5.2
자동차	15.2	15.3	18.4	10.9	9.3	3.1	4.5	6.8	
조선	-28.1	-24.6	-24.7	0.2	4.6	8.5	31.3	7.3	
전자	세탁기	6.9	7.3	8.2	-3.6	-3.8	-7.5	-10.3	-3.6
	냉장고	18.5	10.6	10.6	0.7	1.9	-4.0	-4.8	0.2
	에어컨	0.1	8.0	11.6	16.3	13.9	12.5	7.8	8.3
	컬러TV	5.2	2.0	-0.2	12.6	11.0	3.0	7.0	-5.5

	컴퓨터	6.4	8.4	7.8	7.5	2.2	-8.5	1.1	-3.8
	반도체	9.8	9.3	10.4	9.2	9.1	7.5	9.7	14.3
	핸드폰	22.6	24.0	25.8	14.0	11.1	-2.3	7.6	1.0
서비스	화물운수	9.3	9.8	10.0	7.5	7.7	8.1	9.0	4.8
	여객운수	5.7	5.8	5.6	2.5	3.3	5.0	4.5	5.0
	우편 <sup>3)</sup>	30.1	31.8	33.8	35.1	34.3	34.8	34.3	-
	통신 <sup>3)</sup>	7.9	7.8	7.5	15.1	15.0	15.0	15.0	-
	소매업	13.2	13.4	13.6	12.4	12.3	12.3	11.9	11.7
	음식숙박업	8.7	8.9	9.0	10.1	9.7	8.4	8.7	9.7

자료 : 중국국가통계국, 「중국경제경기월보」, 각 월호

- 주 : 1) 공업 전체는 부가가치증가율  
 2) 비교가격 기준으로 계산  
 3) 각월 1월부터 누계 기준

## □ 11월 중국 제조업 PMI 지수, 관방과 민간 모두 하락세

○ 11월 중국 관방 제조업 PMI 지수는 50.3으로 전월대비 0.5 p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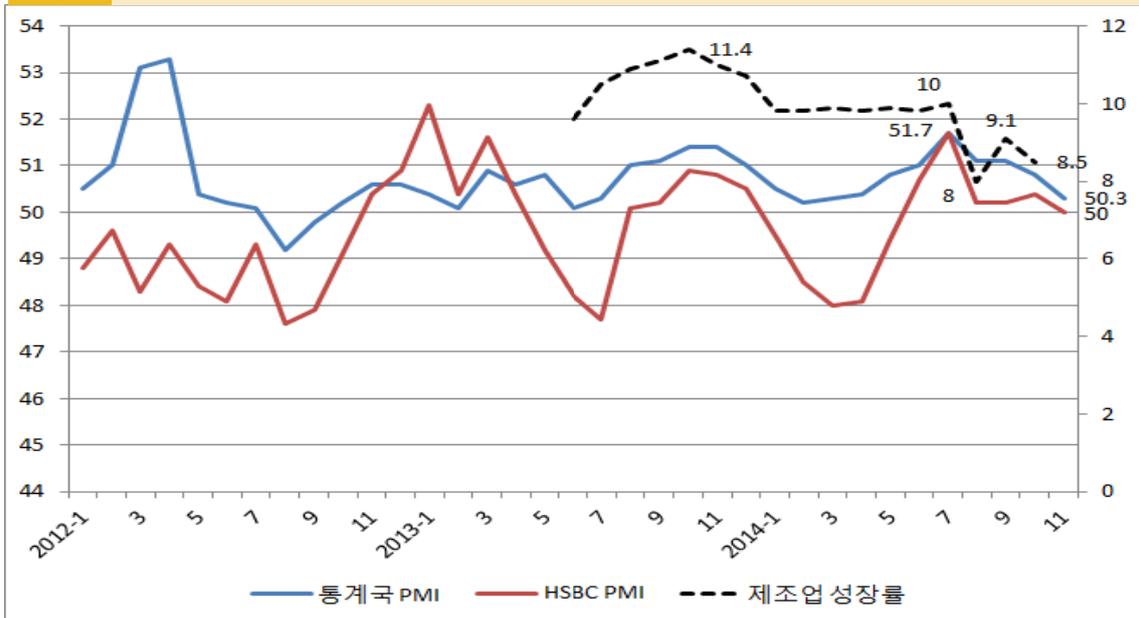
-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이 51.6으로 전월대비 0.3 포인트 하락, 중형기업은 48.4로 전월대비 0.7 p 하락, 소형기업은 47.6으로 전월대비 0.9 P 하락하는 등 모든 기업들이 하락세를 시현
- 생산지수(52.5)는 전월대비 0.6 p 하락, 신규주문지수(50.9)는 전월대비 0.7 p 하락, 원자재재고지수(47.7)로 전월대비 0.7 p 하락
- 수출 신규주문지수는 48.4로 전월대비 1.5 p 급락, 수입지수는 47.3으로 전월대비 0.3 p 하락
- 종업원지수는 48.2로 전월대비 0.2 하락, 제품재고지수는 47.2로 전월대비 0.7 p 하락하여 고용과 재고 상황이 악화

○ 한편, 11월 HSBC(汇丰) PMI지수는 50.0으로 전월대비 0.4 p 하락

- 신규주문지수와 신규수출주문지수가 여전히 상승세를 보이거나 상승 폭이 크게 둔화되고 있고, 고용과 재고 모두 상황이 악화되는 모습

- 제조업의 성장동력은 약해지고 있는 반면, 물가상승 압력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11월 21일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조치는 부동산시장 안정과 제조업 투자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 중국경제의 하방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는 확대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HSBC 전문가가 강조

**그림 1** 중국 관방 및 민간 제조업 PMI지수 변동 추이



자료: 국가통계국([www.stats.gov.cn](http://www.stats.gov.cn)); Markit, HSBC([www.markiteconomics.com](http://www.markiteconomics.com))



### □ 제3차 전국경제서베이 조사 결과 발표

- 2013년 12월 31일 실사 기준으로 2013년 중국 GDP 총량은 기존치보다 3%가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는 지난 두 차례 실사시보다는 증액 규모가 작아진 것임.
  - 2004년 제1차 서베이에서는 GDP 총량이 기존치보다 16.8%가 증가하였으며, 2008년 제2차 서베이에서는 기존치보다 4.45%가 더 증가하였음.
  - 2004년과 2008년 서베이지 기존치보다 실제 조사결과치가 더 크게 나타난 것은 주로 서비스산업에 대한 기존의 통계조사가 부실했기 때문, 제3차 서베이에서도 증가 폭은 주로 제3차 산업에 의해 발생
- 제3차 조사 결과에 따라 금년 성장률은 소폭 상향 조정될 것으로 예상
  - 금년 3/4분기까지 경제성장률이 7.4%를 기록하였으나, 제3차 서베이 결과를 반영하면 7.5%를 약간 상회할 것을 예상, 따라서 정부의 당초 목표치인 7.5%는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판단
- 제3차 서베이 결과 드러난 특징으로는;
  - 제3차산업과 소형기업들이 빠른 발전세를 시현
    - ※ 제3차 산업의 법인수는 전체 법인수의 74.7%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는 2008년치보다 5.7% 포인트가 늘어난 것임.

※ 제2차 산업과 제3차 산업의 소형기업 법인 숫자는 785만개로 전체 법인수의 95.6%를 차지, 종사자수는 1억 4,730만명으로 전체 종사자수의 50.4%를 차지

- 전략적 신흥산업의 위상이 뚜렷이 제고

※ 제2차 산업과 제3차 산업중 전략적 신흥산업에 해당되는 법인수는 16.6만개로 전체 법인수의 2%를 차지

※ 그중 에너지절약, 환경보호산업이 7.1만개로 전체 법인수의 0.9%를 차지하였으며, 신소재산업은 4.7만개로 0.6%를 차지

※ 전략적 신흥산업에 종사하는 인력은 2,362.3만명으로 전체 법인 종사자수의 8.1%를 차지, 그중 에너지절약, 환경보호산업이 1,003.9만명, 신소재산업이 707.9만명을 기록

- 기업들의 연구개발 활동이 크게 증가

※ 규모 이상의 공업기업중 연구개발조직이 운영중인 법인수는 54,832개로 2008년에 비해 101%가 증가, 전체 공업 법인수의 14.8%를 차지

※ 연구개발 종사 인력은 249.4만명/년으로 2008년보다 102.8%가 증가

※ 2013년 연구개발비 지출액은 8,318.4억 위안으로 2008년보다 170.7%가 증가

※ 특허신청 건수는 56.1만건으로 2008년보다 223.2%가 증가

## □ 中 재정부, 자동차 타이어 등 4가지 상품의 소비세 취소

○ 2014년 11월 25일, 중국 재정부는 «소비세 조정에 관한 통지(关于调整消费税政策的通知)»(이하, ‘통지’ 라 약칭)를 발표, 통지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실린더 용량 250ml 미만의 오토바이의 소비세를 취소

- 실린더 용량이 250ml 이상인 오토바이에 대해서는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각각 3%와 10%의 세율로 소비세 징수

- 자동차 타이어에 대한 소비세 취소

- 자동차용 유연휘발유에 대한 소비세를 취소하고 일률적으로 무연 휘발유 세율을 적용
- 알콜에 대한 소비세 취소, 알콜 소비세 취소 후 “술 및 알콜” 이라는 품목은 “술” 로 바뀌고 현행 소비세 정책을 지속 적용

○ 본 통지의 내용은 2014년 12월 1일부터 집행될 예정이다.

**표 1 중국 소비세 수정 명세표**

품목	조정 세율
一. 담배	
1. 권연(卷烟)	
(1) 갑(甲)류 권연	56% + 0.003위안/대
(2) 을(乙)류 권연	36% + 0.003위안/대
(3) 도매단계	5%
2. 여송연	36%
3. 각연초	30%
二. 술 및 알코올	
1. 맥주	20% + 0.5위안/500g(혹은 500ml)
2. 황주	240위안/톤
3. 맥주	250위안/톤
(1) 갑류맥주	220위안/톤
(2) 을류맥주	10%
4. 기타 술	5%
5. 알코올	
三. 화장품	30%
四. 귀중 장신구, 보석, 옥석(玉石)	
1. 금은 장신구, 백금 장신구, 보석 및 보석제품	5%
2. 기타 귀중 장신구와 보석, 옥석	10%
五. 폭죽, 불꽃(焰火)	15%
六. 완제품 오일	
1. 휘발유	
(1) 유연 휘발유	1.40위안/L
(2) 무연 휘발유	1.00위안/L
2. 디젤유	0.80위안/L
3. 항공 등유	0.80위안/L
4. 나프타	1.00위안/L
5. 용제유(溶剂油)	1.00위안/L
6. 윤활유	1.00위안/L
7. 연유	0.80위안/L
七. 자동차 타이어	3%

八. 오토바이	
1. 실린더 용량(배기량, 이하 동일), 250ml(250ml 포함)이하	3%
2. 실린더 용량 250ml 이상	10%
九. 소형자동차	
1. 승용차	1%
(1) 실린더 용량(배기량, 이하 동일) ≤ 1.0L	3%
(2) 1.0L < 실린더 용량 ≤ 1.5L	5%
(3) 1.5L < 실린더 용량 ≤ 2.0L	9%
(4) 2.0L < 실린더 용량 2.5 ≤ L	12%
(5) 2.5L < 실린더 용량 3.0 ≤ L	25%
(6) 3.0L < 실린더 용량 4.0 ≤ L	40%
(7) 4.0L < 실린더 용량	5%
2. 중경형 상용 버스	
十. 골프공 및 골프장비	10%
十一. 명품 시계	20%
十二. 요트	10%
十三. 목제 일회용 젓가락	5%
十四. 나무 마루	5%

### □ 中, 석유 비축량 처음으로 공개

- 중국 통계국은 석유비축 1기공사가 완공되어 가동중에 있으며, 현재 석유 비축량은 1,243만 톤이라고 중국 석유 비축량에 대해 처음으로 언급
  - 이는 2014년 10월 중국 원유 수입량 기준으로 16일분에 해당되는 분량으로 국제에너지국(IEA)이 제시한 90일치분보다 크게 미흡한 수준, 참고로 미국의 7억 배럴, 일본의 3억 배럴에도 훨씬 못 미치는 수준
- 중국 석유비축 1기공사는 저우산(舟山), 쩐하이(镇海), 다롄(大连), 황다오(黄岛)등 4개의 국가 석유비축기지를 포함하고 있고 총 비축 가능용량은 1,640만 m<sup>3</sup>, 1,243만톤임.
  - 그 중, 저우산 기지의 석유 비축가능용량은 500만 m<sup>3</sup>, 398만톤
  - 쩐하이 기지의 석유 비축가능용량은 520만 m<sup>3</sup>, 378만톤
  - 다롄 기지의 석유 비축가능용량은 300만 m<sup>3</sup>, 217만톤

- 황도우 기지의 석유 비축가능용량은 320만 m<sup>3</sup>, 250만톤
- 2003년부터 중국은 석유 비축기지를 건설하기 시작하였고 향후 15년을 3등분하여 석유비축 인프라를 완성할 예정, 총 투자액은 1,000억 위안에 달할 것으로 예상
- 1기공사 기지들이 연해지방에 집중 분포되어있는 한편, 2기공사들은 연해와 서부내륙지역으로 분포가 확장되는 추이를 보이고 있음.
  - ※ 2기공사에는 텐진(天津), 광둥잔장(广东湛江), 광둥후이저우(广东惠州), 장쑤전탄(江苏金坛), 신장싼싼(新疆鄯善), 신장두싼즈(新疆独山子), 라오닝진저우(辽宁锦州), 간수란저우(甘肃兰州)등 8개 기지가 있음.
- 과거 중국은 주로 중동, 서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등 지역에서 원유를 수입하였고 주로 해상통로를 통하여 운반하였으므로 1기공사 기지들은 연해지방에 집중 분포되어 있음.
- 현재, 중국은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국가들로부터 원유 수입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어 2기공사에서는 해상통로와 육로를 함께 고려한 것으로 보여짐.
- 2014년 11월 20일, 중국은 «에너지발전전략행동계획(能源发展战略行动计划)(2014-2020년)»을 발표하고 2020년까지 에너지 자급률을 85%로 제고하고 석유비축규모도 적극 확대시킬 것을 결정
- 기간 내 중국은 석유비축 2기공사를 가속화 하고 3기공사를 적극 추진할 계획
- 또한, 민간자본이 석유비축사업에 투자하고 의무비축 인프라와 상업비축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을 적극 장려
- 한편, 일부 전문가들은 석유비축 2기공사 중 4개의 석유저장고(총 저장량: 8,810만 배럴)가 이미 완성되었고 최근 유가 하락으로 이 저장고들은 이미 채워졌을 것으로 가정하면 중국의 실제 석유비축량은 발표된 수치보다 더

클 것으로 보고 있음.

## □ 민간자본의 공공인프라 투자 허용과 장려

- 12월 4일,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정부와 민간자본 협력 증대에 관한 지도 지침(關於開展政府和社會資本合作的指導意見)’을 발표하고 민간자본의 공공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적극 장려하기로 결정
  - 중국정부는 독점경영, 지분합작 등의 방식을 통해 정부와 민간의 공공인프라에 대한 투자협력 플랫폼(PPP; 민관협력투자: Public-Private-Partnership)을 구축할 방침
- 중국정부는 공공인프라에 대한 지방정부의 역할을 직접적인 공급자, 관리자에서 민간자본과의 협력을 통한 감독자 역할로 전환할 것을 강조
  - 각 지방정부는 현지 사정에 적합한 합리적인 투자회수 체제를 구축하고 BOT·BOO·BOOOT 등 다양한 형식으로 공공인프라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유도할 것
    - ※ BOT(Build-Own-Transfer): 인프라 시설 완공 후 일정기간 동안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시설의 운영권이 인정되며, 기간 만료시 소유권이 정부에 귀속되는 방식
    - ※ BOO(Build-Own-Operate): 인프라 시설 완공과 동시에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시설의 소유권과 운영권을 부여하는 방식
    - ※ BOOT(Build-Own-Operate-Transfer): 인프라시설 완공 후 소유권과 운영권 모두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되어 일정기간 운영 후 정부에게 소유권과 운영권을 양도하는 방식으로 BOT와 BOO의 중간단계
- PPP 사업 대상 범위로 천연가스, 전력공급, 수도, 난방공급, 오수처리, 쓰레기 처리 등 시정 인프라와 도로, 철도, 비행장, 궤도열차 등 교통인프라, 의료, 여행, 교육, 양로 등 공공서비스, 수리, 자연환경 등을 포함
- PPP 사업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각 지방정부는 매월 5일 이전에 프로젝트 진전 사항을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 월례 보고

- 이밖에도 ‘지침’에는 프로젝트 선정과 관리 방법, 파트너 선정, 업무 평가, 퇴출 시스템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
- 상기 발개위 지침이 발표된 이후, 재정부는 상하수도·난방·쓰레기 처리·환경보호·교통·신에너지자동차·지하 종합 파이프망·의료·스포츠 등 사업이 포함된 1,800억 위안 규모의 30개 PPP 프로젝트 리스트를 발표



## 중국 전력산업 현황과 한중 협력 확대방안

한국전력 북경지사장 조죽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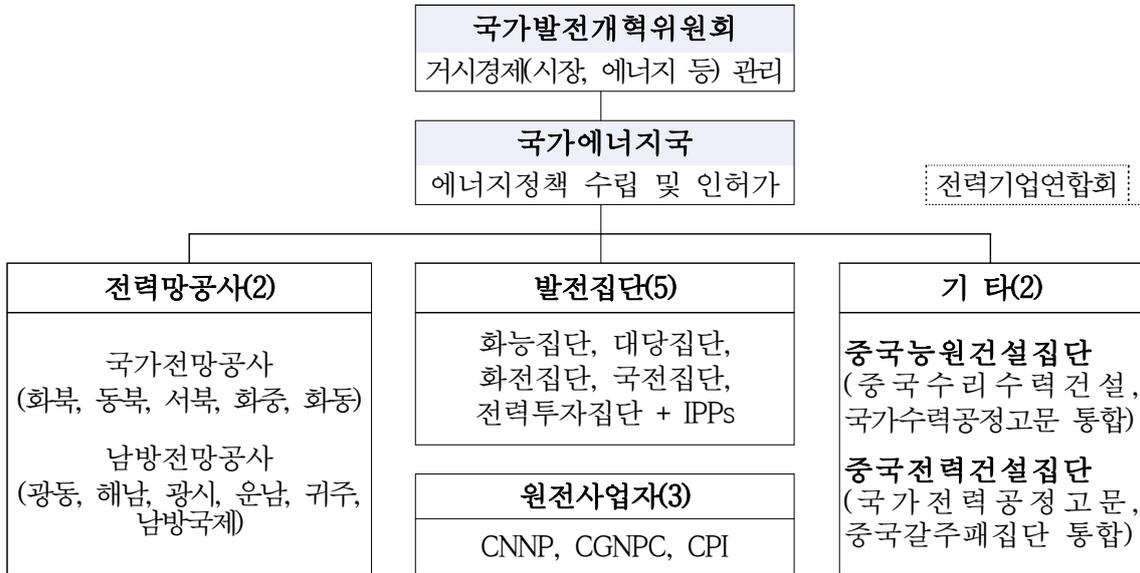
### 1. 중국 전력산업 개요

#### □ 전력산업 연혁 및 구조

- 중국 전력산업은 '97년 이전에는 전력공급부족 해결을 위한 설비확충에 주력하기 위해 중앙정부의 전력공업부와 지방정부의 전력국에서 전력정책과 전력산업을 총괄
- '97년 이후 아시아 금융위기 등에 따른 수요침체와 공급과잉으로 인한 비용절감과 전력가격 인하를 위해 국가전력공사를 설립('97.1)하고 전력공업부('98.2 폐지) 기능은 국가경제무역위원회 산하의 '전력사'에서 담당하게 함으로써 정부와 기업기능을 분리하였으며 제한적인 도매시장을 시범적으로 운용하였으나 공정경쟁 기반미비로 '01년 중지함.
- '02년 4월 중국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전력체제개혁을 통해 발전부문(5개)과 전력망부문(2개)을 분리하고, 국가전력감독관리위원회를 설립('03.3)하여 발전부문의 경쟁시장 도입 및 광역전력망 연결을 추진하여 왔으나 여러 제도적 미비로 인해 현재 답보상태에 있음.
- 중국 전력산업정책은 현재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 산하에 국가에너지국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산하에 아래와 같이 여러 전력기업이 있음.
- 중국은 앞으로 송전, 배전 및 판매분야를 분리하고, 발전가격 경쟁시스템

을 도입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전력시장을 경쟁구조로 전환하여 자원배분의 최적화를 도모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

그림 1 중국 전력산업구조



□ 중국 전력설비 현황(한국과 비교)

○ 발전설비 현황

- 중국의 발전설비 용량은 '13년말 현재 124,738만kW로 한국의 약 15배에 달하며, 화력발전 비중이 69%로 가장 크고, 수력이 22%(한국 7%)이나 원자력 비중은 1%(한국 24%)에 불과함.

표 1 한국과 중국 전력산업구조 비교(2013년말 기준, 만 kW)

구분		화력	수력	원자력	풍력	기타	계
중국	용량	86,238	28,002	1,461	7,548	1,489	124,738
	점유율(%)	(69.1)	(22.4)	(1.2)	(6.1)	(1.2)	(100.0)
한국	용량	5,648	646	2,072	46	285	8,697
	점유율(%)	(65.0)	(7.4)	(23.8)	(0.5)	(3.3)	(100)

- '14년 중국 발전설비 용량은 13.5억kW로 전년대비 1억kW 증가(8%↑) 예상되며 비화석에너지 발전설비는 4.5억kW로 전체설비의 34% 점유(5,600

만kW 신설) 예상

○ 송변전설비 현황

- 중국의 송변전 회선공장이 한국의 16배이며 변전용량은 8배임.

**표 2** 한국과 중국 송변전설비 비교(2013년말 기준)

구 분		1000kV ±800kV(DC)	750kV [765kV]	500kV	330kV [345kV]	220kV [154kV이하]	계
회선공장 (c-km)	중국	5,213	11,432	147,075	22,517	320,316	<b>506,553</b>
	한국	-	835	-	9,005	22,409	32,249
변전용량 (만kVA)	중국	1,800	5,320	82,686	7,098	130,754	<b>227,658</b>
	한국	-	3,112	-	11,710	13,130	27,952

주: 중국 750kV에는 ±600kV 포함, 500kV에는 ±500kV, ±400kV 포함.  
220kV는 중국은 220kV 이상이나, 한국은 154kV 이하[154kV, 66kV, ±180kV(DC)] 포함

○ 전력판매량

- 중국의 전력판매량은 5.3조kWh로 한국의 11배에 달하고 있음.
- '14년 중국 전력소비량은 5.5조kWh로 '13년 대비 4.0% 증가할 것으로 예상

**표 3** 한국과 중국 전력판매량 비교(2013년말 기준, 억 kWh)

구 분		'07	'08	'09	'10	'11	'12	'13
중국	판매량	32,644	34,510	36,812	42,278	47,306	49,774	<b>53,474</b>
	증가율(%)	14.5	5.7	6.7	14.8	11.9	5.2	7.5
한국	판매량	3,688	3,851	3,945	4,342	4,551	4,666	4,749
	증가율(%)	5.8	4.4	2.4	10.1	4.8	2.5	1.8

## □ 중국의 전력기업 현황

### ○ 전력망공사

- 우리나라의 한전과 같은 송배전망회사로 국가전망, 남방전망의 2대 전력망공사가 있음.
- 국가전망은 2012년 12월 전력산업구조개편에 따라 설립된 국영송전망회사로서 산하에 5개 지역별 본부가 있으며, 중국 국토의 88% 및 11억명을 대상으로 전력을 공급하고 있음. 2013년 기준 종업원 189만명, Forbes 선정 세계 500대 기업 중 7위임.

(2013.12)

구 분	규 모	구 분	규 모
자산총액	2조 5,602억 위안	송전선로	77.1만km
전력판매량	3조 5,227억 kWh	변전용량	30.3억kVa
판매수입	2조 492억 위안	송배전 손실률	6.83%

- 남방전망은 2012년 국가전망에서 분리되어 중국의 남쪽 5개성 지역의 전력공급을 담당하고 있으며 2013년 기준 종업원은 31만이며 Forbes 선정 세계 500대 기업 중 134위임.

(2013.12)

구 분	규 모	구 분	규 모
자산총액	5,872억 위안	송전선로	16.5만km
전력판매량	7,433억 kWh	변전용량	6.9억kVa
판매수입	4,462억 위안	송배전손실율	6.06%

### ○ 5대 발전집단

- 5대 발전집단은 전국에 각자 발전소를 보유하고 있으며, 중국 발전설비 전체의 47%(5.84억kW)를 점유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성정부 등 지방정부나 민간사업자 소유임.

(2013.12)

구 분	화능	대당	화전	국전	중전투	계
설비용량(만kW)	14,329	11,948	11,300	12,300	8,968	58,845
발전량(억kWh)	6,397	5,162	4,728	5,333	3,494	25,114
자산총액(억元)	7,514	6,161	6,494	7,500	5,304	32,973
매출액(억元)	3,000	1,911	2,118	2,340	1,900	11,269
영업이익(억元)	208.4	110.7	151.7	157.9	111.6	740.3
순 이익(억元)	127.9	74.3	96.7	103.4	71.5	473.8

○ 3대 원전집단

- 중국 원전사업자는 중국핵능집단(CNNP), 중국광핵집단(CGNPC), 중국전력투자집단(CPI)이 있으며, 3세대 원전기술 도입을 위해 국가핵전기술공사(SNPTC)를 신설함('07.5)

그 룹		3대 원전집단		
회 사		중국핵능(CNNP)	광핵집단(CGNPC)	전력투자집단(CPI)
원 전 부 지		산먼, 친산, 텐완	링아오, 타이산, 양장, 닝더	하이양, 흥엔허
설 비	운영	10기(6,038MW)	10기(9,822MW)	
	건설	13기(11,400MW)	14기(15,374MW)	2기(2,000MW)

- 운전중 원전현황

전력회사	발전소	기 수	노 형	용량(MW)	위 치
CNNP (10기)	친산 I 1	1	PWR	298(2)	절강
	CGNPC	4	PWR	610(4)	절강
	친산III 1, 2	2	PHWR	650(2)	절강
	텐완 1, 2	2	PWR	990(2)	강소
	CEFR <sup>1)</sup>	1	FBR	20(1)	타리
CGNPC (10기)	다야베이 1, 2	2	PWR	944	광둥
	링아오 1, 2	2	PWR	938	광둥
	링아오 3, 4	2	PWR	1,020	광둥
	닝더 1	1	PWR	1,018	복건
	흥엔허 1, 2	2	PWR	1,000	요녕
	양장 1	1	PWR	1,000	광둥
합 계		20		15,860	

- 건설중 원전현황

전력회사	발전소	기 수	노 형	용량(MW)	준 공	위 치
CNNP (13기)	장지양 1, 2 등	12	PWR	610 ~ 1,000	'14 ~ '17	광둥 외
	스다오완 1	1	HTGR <sup>2)</sup>	200	'16	산둥
CGNPC (14기)	홍옌허 3, 4 등	14	PWR	1,000 ~ 1,660	'14 ~ '19	요녕 외
CPI(2기)	하이양 1, 2	2	PWR	1,000	'14 ~ '16	산둥
합 계	합 계	29		28,774		

## 2. 중국 전력산업 발전전망 및 특징

### □ 중국 전력산업 발전전망

#### ○ 12·5(2011~2015) 에너지 발전계획

- 중국 정부는 12·5 기간 에너지원의 탐사/개발을 강화하고, 청정에너지 개발 및 분산형 전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서부 석탄 자원의 개발, 비전통 천연가스 개발, 수력발전 및 신재생에너지 적극적 개발에 주력하는 한편, 송전망 등 전력 운송시설을 확충하면서, 전력가격 구조 등 전력시장 개혁에 주력하기로 함.
- 에너지국은 당초 12·5 에너지원별 발전계획을 수정('13.1)하여 2015년 설비목표를 1,437,000MW에서 1,490,000MW로 확대하였음.
- 중국은 '13년 현재 화력발전 비중이 69.1%로 처음으로 70% 아래로 내려감.

1) CEF(China Experimental Fast Reactor): 중국 고속 실험로 역할

2) HTGR(High-Temperature Gas-cooled Reator): 고온가스 냉각로

구분(MW)	'10년(MW)	비율(%)	'15년(MW)	비율(%)	증감('15-'10)
화 력*	683,248	71.1	960,000	64.4	276,752
수 력	210,657	21.9	290,000	19.5	79,343
원 자 력	10,824	1.1	40,000	2.7	29,176
천연가스	26,424	2.7	56,000	3.8	29,576
풍 력	29,576	3.1	100,000	6.7	70,424
태 양 광	256	0.1	21,000	1.4	20,744
기 타	28	0.0	23,000	1.5	22,972
합 계	961,013	100.0	1,490,000	100	528,987

○ 13·5(2016~2020) 에너지 발전계획 기본방향

- 중국 에너지국은 2016년부터 시작되는 차기 5개년 에너지발전계획(13·5)의 기본방향을 아래와 같이 정립('14.9)하였음.

① 프로젝트 심사·비준절차 간소화 및 투명화를 통한 에너지구조 최적화

② 청정화력발전을 위한 대대적 설비개조 및 석탄소비총량 통제목표 설정

※ 신규석탄화력은 표준탄 300g/kWh 이하 수준으로 설비를 개조(운영발전소는 5년내)해야 하며, 오염물 배출은 가스발전 수준으로 낮추어야 함.

※ 석탄소비통제와 더불어 소형석탄보일러를 도태시키고 전기, 가스설비로 개조 추진시켜야 하며, 탐사개발을 강화하여 '20년까지 셰일가스와 석탄층가스 생산량 300억㎥ 달성에 주력

③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대폭 증가시키고 원전의 안전적 발전에 주력

※ '20년 목표: 수력 3.5억kW, 풍력 2억kW, 태양광 1억kW, 원전 5,800만kW

□ 중국 전력시장 특징

○ '에너지 구조개선 추진(2014年 能源工作指导意见)

- 중국 정부는 에너지 수급계획에 따라 전체 발전량에서 화력발전 비중을 줄이고 태양에너지 발전산업을 더욱 강화하며, 후쿠시마 사고로 중단되었던 원전건설을 허용하여 에너지구조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밝힘.

- 적정시기 원전 인허가업무 재개, 연해지역 원전건설 지속추진\*
- '14년 태양광 설비증설 14GW로 확대, 전력망 연계, 보조금 지급 강화
- 에너지업종 낙후설비 교체, 천연가스 및 비화석에너지 사용비중 확대
- 연생산량 9만톤 이하 탄광 폐쇄, 채굴량 30만톤 미만 광산 신규불허

- 시진핑 주석은 국제 최고의 안전표준에 따른 안전확보의 전제하에 동부 연해지역의 신규 원전 프로젝트 건설을 재개하라고 지시('14.6)

- 비화석에너지 확대와 관련한 주요정책을 보면 다음과 같음.

에너지 효율제고	· 단위 GDP당 에너지소모량 <sup>3)</sup> 0.71톤 표준석탄/만위안 ('10년 대비 12% 감축)
에너지 구조전환	· 비화석에너지 소비비중 10.7%로 확대 · 비화석에너지 발전설비 32.7%로 확대 · 천연가스 1차 에너지 비중 6.5% · 석탄소비 비중 65% 이하 유지
에너지 생산력 강화	· 에너지 총생산량 35.4억톤 표준석탄(전년 比 4.3% ↑) · 석탄생산량 38억톤(2.7% ↑) · 원유생산량 2.08억톤(0.5% ↑) · 천연가스 생산량 1,310억㎥(12% ↑) · 비화석 에너지발전 1.3조kWh(11.8% ↑)
에너지 소비통제	· 에너지 총소비량 38.8억톤 표준석탄(전년 比 3.2% ↑) · 전기사용량 5.72억kWh(7% ↑) · 석탄소비량 38억톤(1.6% ↑) · 석유소비량 5.1억톤(1.8% ↑) · 천연가스 소비량 1,930억㎥(14.5% ↑)

### ○ 에너지 국유기업 혁신추진

- 중국 정부는 국유기업을 민간에 개방(혼합소유제)함으로써 국유기업에 현대기업제도를 도입하여, 국유기업 체제개혁을 지속 추진할 계획에 있으며, 국유기업의 혁신을 유도하기 위해 8항 规定과 6항 禁書を 준수토록 하고 3公(경비, 차량, 접대비)에 대한 경비절감을 강화하고 있음.

3) 단위GDP당 에너지소모량(单位GDP能耗): 1만 위안 GDP를 생산하는데 소모되는 에너지량

- ※ 8항 규정 : 행사규모 간소, 행사 최소, 문서 간소, 해외방문 간소, 시민불편 최소, 신문보도 제고, 출판물 간소, 청렴준수
- ※ 6항 금령 : 공금사용 선물, 상급기관 대상 특산품 보내기, 금전수수, 걸치레, 과도한 접대 및 도박 금지

- 또한 시진핑 국가주석의 에너지 중앙기업에 대한 강력한 반부패조치 일환으로 석유산업에 이어 전력산업에 대한 관리감독, 감찰 및 기율조사(기율검사조 파견)가 증가하고 있으며, 각종 구매, 입찰, 투자 등 핵심적 부패안전에 대해 처벌도 강화하고 있음.

○ 석탄가격 안정, 전력수급 균형하에서 지속적 전력설비 증가

- ‘세일가스’와 석탄층가스 개발 및 생산확대로, 수요증가로 인한 석탄가격 상승요인이 제한적이었고, 석탄생산통제 대상이 소형탄광에 집중되어 석탄공급량 및 재고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였음.
- 한편, 예상외의 경기성장 둔화로 인해 올해 연평균 발전설비 이용시간은 4,300시간으로 전년 대비 5%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하지만 비화석에너지원 증가로 전체 전력설비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국가능원국 석탄생산 제한정책 및 목표

· 정책 : 생산량 30만톤/년 이하 및 90만톤/년 이하 가스사고 고위험 탄광 신규건설 제한 및 연생산량 9만톤 이하 탄광 폐쇄

· 목표 : '15년까지 전국 석탄회사 4,000곳 이하로 감축하고, 소형탄광 생산 비중 17% → 12%로 축소

○ 풍력 수익하락(송전제약 지속) 및 태양광 발전축진 주력

- 유럽 탄소시장에서 거래되는 CDM 가격이 최근 €0.2/tCO<sub>2</sub>에 거래되거나, 거래가 부진한 상황으로 풍력사업 수익하락에 따른 중국 정부의 풍력발전 가격 보조금 지급 등 지원정책은 지속될 전망이다.
- 하지만 12·5 에너지 발전계획에 따른 풍력발전 확충 대비 송전망 건설이 여전히 부진하여 송전제약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태양광의 경우 최대 태양광발전 수요처인 구미지역의 경기회복 지연으로 대외수출을 통한 성장을 기대하기가 곤란함에 따라, 소규모 발전을 통한 자국수요 창출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되며, 2014년 신규 태양광 발전설비 목표를 14GW로 확대함에 따라 분산식 태양광 발전 개발에도 주력할 것으로 전망됨.

- 태양광산업의 건강한 발전촉진에 관한 의견('13.7)

- 분산형 태양광발전사업 허가절차 간소화(발전업무허가증 취득 면제 등)하고, 분산형 태양광발전 총 전력량을 지방정부와 송전망기업에 대한 업적지표로 반영하겠음.
- 자가용 발전전력에 대해 신재생에너지 부가금 징수를 면제하고, 태양광 관련 R&D, M&A 등의 경우 세제혜택을 부여하겠음.
- 선진기술을 보유한 경쟁력 있는 태양광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금융권을 통한 자금을 지원하고, 송전망기업은 태양광발전 건설과 병행하여 송전망 건설 및 생산전력 구매 실시

○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4) 시행

- 중국 정부는 신재생에너지의 효율적 자원개발 및 안정적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발전회사, 전력망회사 및 지방정부에 신재생 적용비율을 의무적으로 할당하기로 하고 '16년부터 시행할 예정임.
- 중국은 현재 7개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이 시범 운영 중에 있으며, 참여기업 수는 2,200개에 이르고, 여기서 거래되는 탄소배출량은 전체 탄소배출량의 30~40%를 차지하며 규모는 11억 5000만톤에 달함('14.6월 기준)
- 대상별 적용방법 및 비율을 다음과 같음.

4) Renewable Portfolio Standard(신재생에너지 의무 할당제)

적 용 대 상	적 용 방 법
발 전 회 사 (5,000MW이상)	○ 설비용량의 <b>11%</b> , 발전량의 <b>6.5%</b> 를 신재생에너지로 충족 ※ 의무비율 미달시 REC <sup>5)</sup> (녹색증서) 구매로 발전비율 충족
전력망 회사	○ 회사별로 3.2%~15%까지 차등(국가전망 5%, 내몽고전망 15%)
지 방정 부	○ 신재생에너지 자원량 및 전력수송능력 등을 기준으로 4개 구역으로 구분하고, 구역별 2%~15%까지 의무비율 차등 ○ 산서성 의무비율 8% (내몽고 15%, 요녕 및 감숙 10%)

### ○ 전력산업 구조개편 및 전기요금제도

- 중국은 전력산업에 민간자본 진입 및 발전회사의 직거래를 허용하여 전력시장 내 경쟁도입을 통한 전력분야 효율을 제고하고 전력가격을 인하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1997년 이후 구조개편을 진행하여 왔으나, 현재 본격적인 경쟁체제하의 전력거래 시장이 도입되지 않아 시장운영기관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고, 시장 및 계통운영은 국가전망공사(남방전력망 제외)에서 담당하고 있음.
- 중국의 전력산업개편은 전력망과 판매의 기능을 분리하고, 구역 송전망과 배전망을 분리한 뒤 궁극적으로 국가전망의 송전망도 5개 구역 전력망회사로 분리하겠다는 계획이나 구체적 실행방안은 미 확정됨.
- 또한, 중국의 전기요금은 정부가 결정하고 있으며, 석탄가격 등락에 따른 전력가격연동제를 계획 중에 있으나, 세부 시행방안 부재로 이마저도 쉽게 이행되고 있지 않음.

### ○ 석탄발전 환경기준 강화

- 중국 정부는 대기환경을 개선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석탄화력에 대한 환경설비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내용은 아래와 같음.  
※ 근거 : 재생에너지 가격부가표준 및 환경전기가격에 관한 통지('13.8), 석탄화력설비 환경전기가격 및 환경시설운영 관리감독방법('14.3)

5) REC : Renewable Energy Certificate(1REC =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1MWh)

<오염물 배출기준 적용시기 및 적용대상>

적용 시기	적용대상	기준 오염물질
'12.1.1	'12년 이후 신설 설비	SO <sub>2</sub> , NO <sub>x</sub> , 먼지
'14.7.1	'12년 이전 건설 설비	
'15.1.1	전체 설비	수은 및 화합물 추가

<오염물질 배출표준 강화내용>

(단위: mg/m<sup>3</sup>)

구분	기존	변경 후
SO <sub>2</sub>	400-1200	100(신설) 혹은 200(운영중)*
NO <sub>x</sub>	450-1100	100(신설) 혹은 200(운영, CFBC)**
먼지	50-200	30
수은 및 화합물	없음	0.03

※ '11.12.31 이전 건설, \*\* '03.12.31 이전 건설 및 CFBC 규제기준

- 석탄화력설비 환경보조금 지급수준 상향조정('13.9)

<환경보조금 상향조정 내용>

(단위: 元/kWh)

항 목	환경 보조금
탈황보조금(脫硫电价)	0.015(동일)
탈질보조금(脫硝电价)	0.008 → 0.01
집진설비 보조금(除尘电价)	0.002(신설)

※ 환경보조금 합산 0.027元/kWh : 015(탈황) + 0.01(탈질) + 0.002(집진)

- 오염물질배출량 기준초과시 처벌규정 강화('14.5)

기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탈황설비 운영률 80~90% 보조금의 1배 벌금부과</li> <li>· 탈황설비 운영률 80%미만 보조금의 5배 벌금부과</li> </ul>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준초과 1배 이내: 초과시간 해당 보조금 몰수</li> <li>· 기준초과 1배 이상: 보조금의 5배 이하 벌금부과</li> </ul>

※ 발전소 오염물질 배출상황 실시간 모니터링 및 환경설비 운영상황 감독, 보조금 불법수령 등 위반 사례 공개

### 3. 중국 전력시장 투자 환경 분석

#### □ 외국인 투자 유치제도

○ 중국정부는 전력분야 외국인 투자유치에 있어서, 투자장려, 투자제한, 투자금지 등 3가지 카테고리를 정해 여러 가지 특혜와 규제정책을 병행하여 왔음.(2014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 참조).

- 현재 외상투자목록에는 발전소 등 에너지설비 건설시 외국인 투자 및 운영을 장려하고 있으며, 전기, 가스의 생산과 공급에 대한 외국인 투자도 장려하고 있음.

#### ○ 외상 투자장려 분야

- 단일 발전기용량 600MW 이상 초초임계 발전소 건설/운영
- 배압(추출)형 300MW 이상 열병합(熱電) 발전소 및 건설/운영
- 물부족지역의 단일 발전기용량 600MW 이상 대형 공랭식 발전소 건설/운영
- 석탄가스화의 복합순환발전(IGCC) 등 청정석탄발전소 건설/운영
- 단일 발전기용량 300MW 이상 순환유동층매간석보일러 발전소 건설/운영
- 발전 위주의 수력발전소 건설/운영
- 원자력발전소의 건설/운영(중국측 대주주 전제)
- 신에너지(태양광, 풍력, 지열, 조력, 파랑, 바이오 등) 발전소 건설/운영
- 전력망 건설/운영(중국측 대주주 전제)
- 해수 이용(해수직접 이용, 해수담화), 급수장 및 중수공장 건설/운영
- 오수처리장 건설/운영, 자동차 충전소, 배터리 교환소 건설/운영

#### ○ 외상 투자제한 분야

- 소규모 전력망 범위 이내, 단일 발전기 용량 300MW 이하의 석탄발전소와 단일 발전기 용량 100MW 이하의 열병합 발전소 건설 및 운영
-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에서 가스, 열의 공급망 건설 및 운영(중국측 대주주 전제)

○ 외상 투자금지 분야

- 대규모 전력망에서 단일 발전기 용량 300MW 이하의 석탄발전소와 단일 발전기 용량 200MW 이하의 열병합 발전소 건설 및 운영

□ 중국 전력산업 외국인 투자현황(원자력 제외)

○ 중국 전력분야는 1979년부터 외국인 직접투자를 받아왔으며, 홍콩, 영국령 버진제도, 미국, 영국, 캐나다, 프랑스 등 27개국 이상이 중국에 진출해 왔음.

- 하지만 얼마 전 유럽, 미국 전력회사들이 중국 전력시장에서 철수한 반면 홍콩, 한국, 태국,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 전력기업들이 대거 진출했으나, 외국인 투자가 고정자산 투자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감소하고 있는 실정임.

<제3국 주요전력회사의 중국 전력시장 투자사례>

국가	전력회사	주요 내용
프랑스	EDF	- 1994년 북경에 대표처(아태지역본부) 설립 - 중국에 4개의 현지법인 운영 중 - 광시라이빈 발전소, 산둥중화발전소(지분 19.6%)
홍콩	Meiya Power	- 1995년 설립된 독립발전사업자, 한국, 중국, 대만에 투자 - 중국에 13개 발전소에 지분투자 중
미국	AES	- 2005년 아시아에서 회사전력사업 수익의 3% 매출달성 - 중국에 7개의 발전소 투자 실적 - 2012년 5개 사업 철수(2개 회사에만 투자 중)
일본	J-Power	- 중국의 산시(山西) 격맹국제 7% 투자 - 시허, 수허 수력발전 2곳 투자, 허취우 화력 투자
일본	큐슈전력	- 대당중일(적봉) 풍력사업 투자(49.5%)
일본	츄코쿠 전력	- 중국의 산시(山西) 격맹국제 투자(3%)
프랑스	SUEZ Energy International	- 유럽 외 북미, 남미, 북아프리카, 중동, 아시아 등에 투자하고 있는 다국적 기업 - 전 세계 36개 발전소 보유 - 장수 전장 발전소에 지분 27% 보유
홍콩	China Resource Power Holdings	- 2001년 설립되었으며 중국내 25개 발전소 운영 중 - 설비용량 12,991MW로서 화력, 수력, 풍력발전 위주

홍콩	CLP Holdings	- 중국에서 운영중인 발전소 10곳 이상
노르웨이	NBT발전유한공사	- 大唐三合(林西)新能源有限公司 투자
한국	KEPCO	- 산서 격맹국제 사업 지분(34%)참여 - 내몽고, 감숙, 요녕 풍력사업 지분(40%) 참여

## □ 중국 전력산업 환경분석

○ 중국은 세계 최대의 전력시장으로서 성장 잠재력이 높아 사업기회가 많고, 지리적으로도 가깝고 동일한 문화권을 가지고 있으며, 국가리스크도 높지 않아 매력적인 투자국이나, 중국 전력산업 환경에 대한 이해와 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 ○ 외국기업 우대정책 유무 여부

- 중국은 이전에 외자기업에 대해서 다양한 혜택을 지원하였으나, 근래에는 중국의 자금력과 기술력의 향상으로 외국투자자에 대한 유치에 소극적일 뿐만 아니라, 기존 혜택도 많이 축소하였음.

- 하지만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서부지역의 경우 아직도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고 있어, 투자지역에 따른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임.

#### <중국 외국기업 우대정책 폐지내용>

- 법인세 우대세율 폐지로 내국기업과 동일세율 적용(15→25%) : '08.1
- 수입기자재 관세, 매출부가세 면세(17%) 폐지 : '08.5
- 중국산 풍력기자재 매입부가세(17%) 일시 환급 폐지 : '09.1
- 도시건설세 및 교육기금(각각 납입부가세 5%) 면세 폐지 : '10.12

#### <서부대개발 관련 우대정책>

- 조세 우대 : 법인세 10% 우대 및 1~2년 면세, 3~5년 50% 감면  
성단위 지방정부 재량으로 지방세 면제 또는 감면 가능
- 투자 환경 : 시장개방, 심사비준 절차 간소화, 신용대출 지원강화 등

## ○ 전원구조, 전력인프라 및 전력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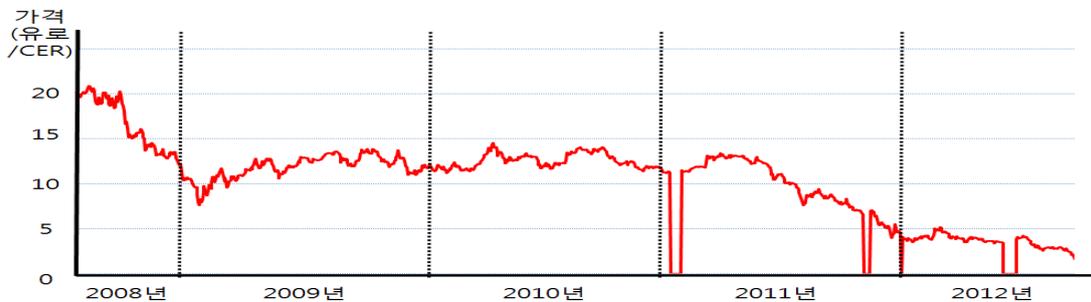
- 중국은 전력자원 분포지역과 전력 소비지의 위치가 다르므로 합리적인 전원구조를 구축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고, 화력발전설비 비중이 낮아지고는 있으나 발전량은 여전히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어, 전원구조가 쉽게 변화하기 어렵고 화력발전에 따른 환경보호관련 제약사항도 많은 편임.
  - ※ 동부 연해지역의 11개 성시가 중국 전력사용량의 약 55%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석탄자원은 대부분 산서, 내몽고 등 서북부 지역에 위치하고 있음.
- 전력 인프라의 경우 그동안 발전설비 확장에 편중되었고 전력망 건설에는 소극적이었으며, 낮은 전력가격과 비합리적인 전력가격 구조로 인해 전력망 분야에 투자도 부족했음.
- 또한, 최종 판매가에서 송배전 가격의 비중은 약 25% 수준이나, 기업이 송배전 부문의 가격결정에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어서 기업이윤이 낮고, 송전손실이 크며, 선로수송능력도 충분하지 못하여 전력망이 불안정하고 사고 예방능력이 높지 않아 일부 안전성 문제도 우려되고 있음.
- 최근 전국적인 대규모의 송전체제 구축에 주력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송전제약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서부에 발전소를 세워 동부의 소비자들에게 공급하는 서전동송(西電東送) 실현이 더디어 지고 있는 실정
- 석탄가격은 시장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지만 전력판매량 및 전력가격은 정부가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연료비 변동에 따른 리스크가 존재함 (Merchant 시장)

## ○ 에너지원별 진출 여건

- 화력발전의 경우 중국은 자국이 보유한 풍부한 석탄자원의 활용 및 저렴한 발전단가 등의 이유로 석탄발전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으로 예상되기에 따라 사업참여 기회가 있을 것으로 예상

- 그러나 이미 중국 자체기술력이 축적되어 상당한 수준에 도달하였고, 친환경성 확보에 따른 정부규제, 안정적인 석탄공급 및 경제성 확보 등을 고려할 경우 외국기업의 진출 효익이 크지 않을 것임.
- 하지만 고효율, 친환경 발전사업 등 신기술 기반의 초초임계압 석탄화력 발전, 석탄가스화 복합발전, 유동층 발전 그리고 천연가스 및 세일가스를 활용한 발전사업은 다양한 사업기회가 있을 것으로 전망됨.
- 풍력발전의 경우 중국이 정책적으로 비화력에너지 비중 증가를 위해 풍력발전설비 비중을 대폭 늘리고 있고, RPS(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 시행으로 풍력자원 선점경쟁이 치열
- 보조금 지급 등 다양한 촉진정책을 펼치고 있으나, 외자기업에 대해서는 우대정책을 폐지하고 있고, CDM 가격도 폭락\* 및 송전제약에 따른 수익성 하락으로 외국기업의 참여가 제한적일 수 있음.

〈탄소배출권(CER) 가격 추이〉



○ 정책결정 및 프로젝트 심사

- 중국의 에너지사업은 대부분 국유기업으로 중국 정부의 통제를 많이 받고 있으며, 정책결정 및 심사과정도 상당히 복잡하고 장기간의 시간을 소요하는 편임. 또한 국유기업에 대한 혼합소유제 적용 등 민간개방에 대한 계획은 제시되었으나 아직 구체적이지 않고, 불투명한 업무처리도 많아 외국기업이 초기 진출시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

### 3. KEPCO 중국 전력사업 추진 현황과 정책 제언

#### □ 중국사업 추진경과

- KEPCO는 1990년대 후반 중국 진산원전 용역사업을 시작으로 중국과 화력, 풍력, 탄광 및 기술용역 등 다양한 영역에서 협력사업을 추진해 오다가 본격적인 사업은 2006년부터 시작하게 되었음.
- KEPCO는 2005년 감속성 풍력사업을 시작으로 현재 내몽고 및 요녕지역에서 중국 대당집단과 합자하여 2대 주주\*로서 풍력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2007년 중국 산서성에서는 산서성 정부와 합자하여 역시 2대 주주로서 화력사업(합자회사명 : 격맹국제)에 참여하고 있음.
  - 중국에서 1대 주주로서 전력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인허가, 규제 및 자원 조달 측면에서 어려움이 많음에 따라 발전소 O&M에 특화하여 2대 주주로 참여하고 있음.
- 중국은 KEPCO의 해외사업 진출국가 중 투자규모(6.2억불)가 가장 크고 안정적인 수익도 창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사업성장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 KEPCO 중국사업 위치도

그림 2 한전 중국사업 위치도



## □ 사업별 추진 현황

표 4 한전 재중국 사업별 추진 현황

사업명		사업현황	전체설비(MW)	한전지분(MW)	기 간
산서 (격맹국제)	화력	운영 14	5,946	2,021	50년
		건설 2	746	254	
	탄광	7개	6.5억톤	2.7억톤	
내몽고	풍력	운영 14	643	257	20년
		건설/계획 4	348	139	
감 속	풍력	운영 2	99	40	
요 녕	풍력	운영 4	177	71	
		건설 1	48	19	
합 계		운영 34 건설 7	운영 6,865 건설 1,142	운영 2,389 건설 412	

- 격맹국제 합자사업은 산서성 정부가 47%, KEPCO가 34%, 일본컨소시엄 10%, 코파펀드 8%, 도이치은행 1%로 구성된 종합에너지사업\*으로 산서성 태원시에 소재하고 있음('07.4 설립)

※ 발전(석탄화력, 풍력, 수력), 탄광, 기타(석탄층 가스, 오수처리, 탈질촉매재생), 부동산

- 풍력사업은 중국대당집단 60%, KEPCO가 40% 지분으로 합자('07.6 설립)하여, 내몽고, 감속 및 요녕에서 대단지 풍력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현재 중국에서의 외국인 투자 풍력사업 중 최대 사업임.

## □ 중국 전력시장 진출 제언

- G2 멤버로 급부상한 중국은 이제 세계의 생산공장에서 소비시장으로의 구조전환을 성공시켰으며, 전력시장에 있어서도 앞으로 무궁한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최대 전력시장임.

- 한-중간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가 구축되고 최근 FTA 체결이 확정되는 등 중국 전력시장 진출을 위한 외부환경은 비교적 밝은 편이라고 판단됨.

- 하지만 중국 전력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아직도 많은 제약요소가 상존하고

있음.

- 전력산업에 대한 중국의 기술력이 향상되었고 자본력도 풍부하여 기술집약적 특정분야 이외에는 외국기업의 진출입지가 좁아졌을 뿐만 아니라, 완전 전력시장의 부재, 전력가격의 불안정성, CDM 가격 하락, 송전제약 및 외국기업에 대한 우대혜택 축소 등 여러 측면에서 리스크 요소가 상존한다고 볼 수 있음.

○ 따라서, 기존 사업성이 입증된 매간석 발전이나, 기술력으로 아직 경쟁력이 있는 초초임계압 석탄화력 및 석탄가스화 복합발전, 중국 정부의 정책적 우선순위의 유동층 발전 및 천연가스 발전사업, 향후 경제성 분석을 통한 세일가스 발전사업 등에 진출하는 방안을 집중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앞으로 CDM 시장 활성화에 대비 풍력 등 신재생 사업 진출에도 지속적인 검토를 병행하여 진출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임.